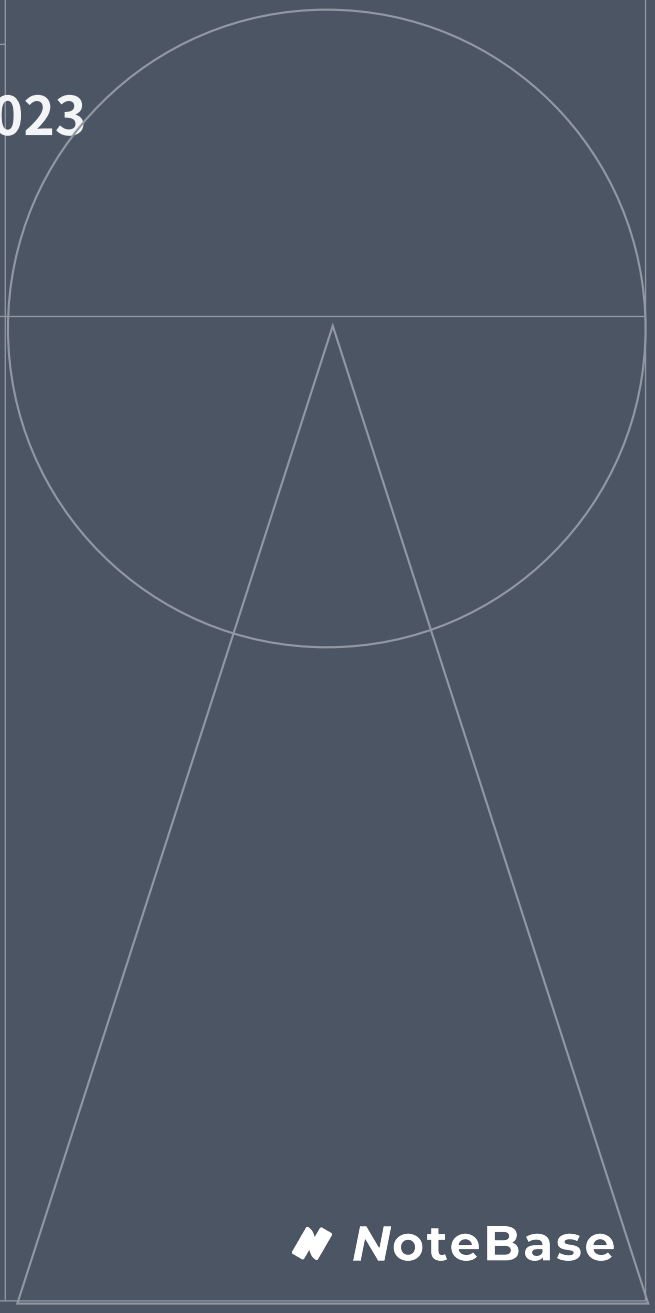
#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재정학 · 2023



NoteBase

# 기출OX 해설집

## 전문직/세무사 · 재정학 · 2023

**전문직/세무사 · 재정학 · 2023**

**문 1. 우리나라 조세 중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① 농어촌특별세
② 주민세
③ 지방교육세
④ 담배소비세
⑤ 문화재관람료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조세를 국세·지방세와 보통세·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은 두 분류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여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인 세목을 찾는 것이다.

**용어 풀이**

목적세는 세수의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조세이다. 이에 비해 보통세는 세수의 용도가 특정 목적에 한정되지 않는 조세이다.

**핵심 구분**

2023년 시행 「지방세기본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세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규정한다.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이지만 보통세이고, 농어촌특별세는 목적세이지만 국세이다. 따라서 지방세와 목적세라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선지는 지방교육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이지만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이다.
틀린 표현: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인 세목으로서의 '농어촌특별세'
올바른 표현: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인 목적세이다.

② X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지만 목적세가 아니라 보통세이다.
틀린 표현: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인 세목으로서의 '주민세'
올바른 표현: 주민세는 지방세인 보통세이다.

③ O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이며, 「지방세기본법」 상 목적세에 해당한다.

④ X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이지만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는 목적세가 아니라 보통세이다.
틀린 표현: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인 세목으로서의 '담배소비세'
올바른 표현: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인 보통세이다.

⑤ X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를 관람하는 대가로 받는 요금으로서 조세가 아니므로 지방세나 목적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인 세목으로서의 '문화재관람료'
올바른 표현: 문화재관람료는 조세가 아닌 관람 대가이다.

**오답 포인트**

'목적세'라는 특징만 보고 농어촌특별세를 고르거나, '지방세'라는 특징만 보고 주민세·담배소비세를 고르는 것이 함정이다. 이 문항은 지방세와 목적세라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구분한 뒤, 지방세 중 보통세와 목적세를 다시 나눈다. 지방세인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지방 목적세는 '지역·교육', 즉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이다.

NoteBase

**문 2.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초과부담은 조세수입에서 사회후생 감소분을 차감한 것이다.

② 초과부담은 주로 조세부담의 전가 때문에 발생한다.

③ 세율이 높으면 조세수입이 늘어나지만 초과부담은 줄어든다.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오히려 작아진다.

⑤ 정액세(lump-sum tax) 부과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정답 5번**

### 출제 포인트

조세의 초과부담이 조세수입 자체가 아니라 조세가 상대가격과 경제주체의 선택을 왜곡하여 발생시키는 순후생손실이라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초과부담은 조세로 인한 민간의 후생 감소분 가운데 정부의 조세수입으로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순후생손실이다. 종량세·종가세처럼 선택을 왜곡하는 조세는 거래량이나 노동·저축 등의 행동을 바꾸어 초과부담을 만들지만, 정액세는 납세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부과하므로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아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선지별 해설

① X — '조세수입에서 사회후생 감소분을 차감'한다는 관계가 반대이다. 올바르게는 초과부담은 조세로 인한 민간 후생 감소분에서 정부가 얻은 조세수입을 차감한 순후생손실이다.
② X — 초과부담의 주된 원인은 조세부담의 전가가 아니라 조세가 상대가격을 변화시켜 소비·생산 등의 선택을 왜곡하는 데 있다. 올바르게는 조세부담의 전가는 부담의 귀착을 바꾸며, 초과부담은 조세에 따른 행동 변화와 거래 감소 때문에 발생한다.
③ X — '세율이 높으면 조세수입이 늘어나지만 초과부담은 줄어든다'는 표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세율이 높아질수록 경제행위의 왜곡이 커져 초과부담은 일반적으로 증가하며, 조세수입도 세율에 따라 반드시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④ X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이 작아진다'는 방향이 반대이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조세로 인한 수요량 감소가 커지므로 초과부담도 커진다.
⑤ O — 정액세는 경제주체의 선택이나 거래량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과하므로 상대가격을 왜곡하는 대체효과가 없다. 따라서 조세수입은 발생하지만 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초과부담과 조세수입의 차감 방향을 뒤집고, ②는 조세부담의 귀착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혼동한다. 또한 ③·④는 세율·탄력성이 커질수록 행동 변화와 거래량 감소가 커져 초과부담이 확대된다는 방향을 반대로 제시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세가 상대가격을 바꾸어 선택과 거래량을 변화시키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선택을 더 크게 바꾸는 높은 세율과 큰 탄력성은 초과부담을 키우고, 선택과 무관한 정액세는 상대가격을 왜곡하지 않으므로 초과부담이 없다.

**암기 포인트**

초과부담은 조세수입이 아니라 왜곡으로 사라진 순후생이며, 세율·탄력성이 클수록 커지고 정액세에서는 0이다.

NoteBase

**문 3. 최적물품세를 도출한 램지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램지규칙은 효율성 측면만을 고려한 과세원칙이다.

② 램지규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재화 간의 관계가 독립적이어야 한다.

③ 램지규칙은 재화 간 조세수입의 한계 초과부담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도출된다.

④ 생활필수품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램지규칙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

⑤ 램지규칙에 의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각 재화에 세율을 부과하여야 효율적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램지규칙의 효율성 기준과 역탄력성 과세가 분배 측면에서 낳는 문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램지규칙은 필요한 조세수입을 확보하면서 조세로 인한 총초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재화별 세율을 정하는 효율성 원칙이다. 재화들의 수요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단순화된 조건에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역탄력성 규칙으로 나타난다. 이 원칙은 형평성을 직접 반영하지 않으므로 생활필수품에 높은 세율이 매겨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고전적인 램지규칙은 주어진 조세수입을 최소의 초과부담으로 조달하는 효율성에 초점을 두며, 소득분배나 형평성은 직접 고려하지 않는다.
② O —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는 단순한 역탄력성 규칙을 적용하려면 재화 간 교차효과가 없는 독립수요를 가정한다. 재화 간 대체·보완 관계가 있으면 교차가격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
③ O — 최적점에서는 각 재화에서 추가 조세수입 1원당 발생하는 한계초과부담이 같아져야 한다. 어느 재화의 한계초과부담이 더 크면 과세 구성을 바꾸어 총초과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생활필수품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램지규칙에 부합'한다는 부분이다. 생활필수품의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순수한 램지규칙은 오히려 높은 세율을 요구한다. 다만 이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키울 수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램지규칙은 비탄력적인 생활필수품에 높은 세율을 부과할 수 있으나,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이다.
⑤ O — 독립수요를 가정한 역탄력성 규칙에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재화에 높은 세율을, 큰 재화에 낮은 세율을 부과해야 초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④는 생활필수품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형평성 논리를 램지규칙의 효율성 논리로 바꾸어 놓았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평가와 '초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효율성 기준은 같은 판단이 아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램지규칙 문항에서는 먼저 효율성과 형평성을 분리한다. 효율성만 보면 비탄력적 수요에는 높은 세율이 대응하고, 재화 간 수요가 독립적일 때 세율은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한다. 생활필수품·저소득층·역진성이 언급되면 형평성 문제를 별도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램지규칙은 '비탄력적일수록 높은 세율'이며, 효율성은 추구하지만 형평성은 보장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4. 단위당 생산비가 57원으로 일정한 독점기업에게 판매단위당 9원의 판매세를 부과한다고 하자. 시장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독점기업이 부담하는 단위당 판매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독점기업과 소비자가 나누어 부담한다.

②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독점기업의 부담이 커진다.

③ 독점기업에게 부과하였으므로 9원 모두 독점기업이 부담한다.

④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고 따라서 모든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므로 독점기업은 0원을 부담한다.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독점기업의 부담이 커진다.

**정답 1번**

### 출제 포인트

우하향하는 직선 수요곡선과 일정한 한계비용을 가진 독점기업에 단위세를 부과할 때, 소비자가격과 기업의 세후 수취가격이 각각 얼마나 변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 조건 정리

역수요함수를 $P = a - bQ$, $b > 0$라 두면 한계수입은 $MR = a - 2bQ$이다. 단위당 생산비가 일정하므로 과세 전 한계비용은 57원이고, 판매단위당 9원의 세금이 부과되면 기업이 체감하는 한계비용은 66원이 된다.

### 사용할 공식

독점기업은 $MR = MC$를 만족하는 생산량을 선택한다. 따라서 과세 전후의 소비자가격은 각각 다음과 같다.
$P_0 = \frac{a+57}{2}$
$P_1 = \frac{a+66}{2}$
직선 수요에서는 한계수입곡선의 기울기가 수요곡선 기울기의 2배이므로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 계산 과정

소비자가격의 상승분은 $P_1 - P_0 = \frac{9}{2} = 4.5$원이므로 소비자는 단위당 4.5원을 부담한다. 기업의 세후 수취가격은 $P_1 - 9$원이므로 과세 전 가격 $P_0$보다 4.5원 낮아진다. 따라서 독점기업도 단위당 4.5원을 부담하며, 9원의 세금은 소비자와 독점기업이 절반씩 나누어 부담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소비자가격은 4.5원 상승하고 기업의 세후 수취가격은 4.5원 하락하므로 소비자와 독점기업이 세금을 나누어 부담한다.
② X.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독점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표현이 틀렸다. 독점기업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공급곡선이 없으므로 경쟁시장의 수요·공급 탄력성 조세귀착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 이 문제에서는 직선 수요와 일정한 한계비용으로부터 기업의 부담이 4.5원으로 결정된다.
③ X. '부과하였으므로 9원 모두 독점기업이 부담한다'는 표현이 틀렸다. 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와 경제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독점기업과 소비자가 각각 4.5원씩 부담한다.
④ X.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와 '모든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표현이 틀렸다. 독점기업의 공급탄력성으로 판단할 수 없고 소비자가격은 세액 9원의 절반인 4.5원만 상승하므로, 독점기업의 부담은 0원이 아니라 4.5원이다.
⑤ X.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독점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표현이 틀렸다. 주어진 직선 수요와 일정한 한계비용에서는 수요곡선의 기울기와 관계없이 단위세의 절반이 소비자가격에 전가되므로 독점기업의 부담도 항상 세액의 절반이다.

**오답 포인트**

③처럼 세금을 법적으로 납부하는 기업이 전액을 경제적으로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또한 ②·④처럼 경쟁시장의 공급탄력성 논리를 공급곡선이 없는 독점기업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직선 역수요 $P = a - bQ$와 일정한 한계비용이 주어지면 $MR = a - 2bQ$와 $MR = MC + t$를 적용한다. 단위세 $t$는 소비자가격을 $t/2$만큼 올리고 기업의 세후 수취가격을 $t/2$만큼 낮춘다.

**암기 포인트**

직선 수요·일정한 한계비용의 독점에서 단위세는 소비자와 독점기업이 절반씩 부담한다.

NoteBase

**문 5. 수요함수가 $Q = 120 - 2P$이고 공급함수가 $Q = P$ 인 완전경쟁시장을 고려하자. 정부가 단위당 12원의 물품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 그 중 생산자의 부담액은?**

① 0원

② 4원

③ 6원

④ 8원

⑤ 12원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물품세 부과 전후의 시장균형을 비교하여 단위당 조세 12원 중 생산자에게 귀착되는 부담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수요함수는 $Q = 120 - 2P_c$, 공급함수는 $Q = P_p$이다. 여기서 $P_c$는 소비자가 내는 가격, $P_p$는 생산자가 받는 순가격이다. 소비자에게 단위당 12원의 물품세를 부과하면 두 가격 사이에는 $P_c = P_p + 12$의 관계가 성립한다. 구해야 할 값은 세금 부과 전 균형가격과 세금 부과 후 생산자 순가격의 차이이다.

**사용할 공식**

세금 부과 전에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므로 $120 - 2P = P$이다. 세금 부과 후에는 $P_c = P_p + 12$를 수요함수에 대입하고,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켜 $120 - 2(P_p + 12) = P_p$를 사용한다. 생산자의 단위당 부담액은 세전 균형가격에서 세후 생산자 순가격을 뺀 값이다.

**계산 과정**

1. 세금 부과 전 균형은 $120 - 2P = P$이므로 $3P = 120$, $P = 40$이다.
2. 세금 부과 후에는 $120 - 2(P_p + 12) = P_p$이므로 $96 = 3P_p$, $P_p = 32$이다.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P_c = 32 + 12 = 44$이다.
3. 생산자 부담액은 $40 - 32 = 8$원이므로 단위당 8원이다. 소비자 부담액은 $44 - 40 = 4$원이며, 두 부담액의 합은 물품세 12원과 일치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0원’은 틀리다. 세금 부과 후 생산자 순가격이 40원에서 32원으로 하락하므로 생산자 부담액은 8원이다.
② X — ‘4원’은 틀리다. 4원은 소비자가 세전 가격보다 더 내는 금액이며, 생산자 부담액은 8원이다.
③ X — ‘6원’은 틀리다. 조세를 소비자와 생산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반응이 대칭일 때의 결과일 뿐이다. 이 시장에서 생산자 부담액은 8원이다.
④ O — 생산자가 받는 순가격이 40원에서 32원으로 8원 하락하므로 생산자 부담액은 8원이다.
⑤ X — ‘12원’은 틀리다. 12원은 단위당 총세액이며, 그중 생산자 부담액은 8원이고 소비자 부담액은 4원이다.

**오답 포인트**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했다는 법적 납세의무와 실제 경제적 부담을 혼동하기 쉽다. 소비자 부과세라도 거래량과 두 가격이 조정되므로 생산자도 부담한다. 또한 ②의 4원은 생산자 부담이 아니라 소비자 부담이고, ③의 6원은 조세가 언제나 반씩 귀착된다고 잘못 가정한 값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세전 균형가격을 구한다. 다음으로 소비자 부과세이면 $P_c = P_p + t$를 세후 균형식에 넣어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순가격을 구한다. 마지막으로 생산자 부담은 세전 가격과 세후 생산자 순가격의 차이, 소비자 부담은 세후 소비자 가격과 세전 가격의 차이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법적으로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했는지가 아니라, 세전·세후에 소비자 지불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이 각각 얼마나 변했는지가 조세귀착을 결정한다.

NoteBase

**문 6.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이다.

② 인플레이션이 있을 경우 감가상각공제의 현재가치는 증가하므로 법인세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③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를 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 법인세제상의 특성이 법인들로 하여금 유상증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유인이 될 수 있다.

④ 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당기순이익이 경제적 이윤보다 커야 한다.

⑤ 법인세가 이윤에 대한 과세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은 소유주인 주주에게 귀착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법인세의 세율, 인플레이션과 감가상각공제, 자금조달 편향, 경제적 이윤과 조세 귀착의 관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조세이다. 경제적 이윤은 수입에서 명시적 비용뿐 아니라 자기자본의 기회비용과 경제적 감가상각까지 뺀 초과이윤이다.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는 생산·투자 결정을 바꾸지 않으므로 그 부담이 이윤의 소유자인 주주에게 귀착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24%이다. 틀린 표현은 '22%'이며, 올바르게는 '24%'이다.
② X - 물가가 오르더라도 역사적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정한 명목 감가상각공제액은 함께 늘지 않는다. 따라서 미래 공제액의 실질가치와 현재가치는 감소하고 법인세 부담은 증가한다. 틀린 표현은 '현재가치는 증가하므로 법인세 부담은 감소'이며, 올바르게는 '현재가치는 감소하므로 법인세 부담은 증가'이다.
③ X -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는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차입금 이자는 일반적으로 비용으로 공제되므로 부채조달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틀린 표현은 '유상증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이며, 올바르게는 '차입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유상증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이다.
④ X - 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가 되려면 과세표준이 자기자본의 기회비용과 경제적 감가상각을 차감한 경제적 이윤과 일치해야 한다. 틀린 표현은 '당기순이익이 경제적 이윤보다 커야'이며, 올바르게는 '과세대상 이윤이 경제적 이윤과 같아야'이다.
⑤ O - 법인세가 정상수익을 제외한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만 부과되면 생산요소의 공급이나 투자 결정을 왜곡하지 않는다. 과세 전 경제적 이윤을 얻던 법인의 소유자인 주주가 그 부담을 지게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명목 감가상각공제액과 그 실질 현재가치를 뒤바꾼 선지이고, ③은 이자비용 공제가 만드는 부채편향의 방향을 반대로 제시한 선지이다. ⑤의 '이윤에 대한 과세'는 정상수익까지 포함한 일반적인 법인소득세가 아니라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율 선지는 과세표준 구간별 최고세율을 확인하고, 감가상각 선지는 인플레이션이 명목 공제액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리는지를 판단한다. 자금조달 선지는 '이자는 공제, 배당과 자기자본의 기회비용은 불공제'라는 차이를 적용한다. 순수이윤세는 기업의 한계적 의사결정을 바꾸지 않으므로 주주 귀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인플레이션은 감가상각공제의 실질가치를 낮추고, 이자비용 공제는 부채편향을 만들며, 순수이윤세의 부담은 주주에게 귀착된다.

NoteBase

**문 7.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세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② 개인소득세는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부과하고 있다.

③ 부가가치세는 최종단계의 부가가치에만 과세되어 수직적 통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④ 비례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성을 개선하게 된다.

⑤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떨어뜨린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소득세의 과세단위·누진성 및 인플레이션 효과, 부가가치세의 과세 방식, 이자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누진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평균세율이 높아지는 세제이며, 물가에 맞추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지 않으면 명목소득 증가만으로도 세부담이 커지는 과표구간 상승 효과가 생긴다.
부가가치세는 생산·유통의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과세하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중복과세를 막는 세금이다.
이자소득세는 세후이자율을 낮추므로 저축에 대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소득세 부담은 감소'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누진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명목액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로 더 높은 구간이 적용되어 실질소득이 늘지 않아도 소득세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올바르게는 '소득세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이다.
② O — 우리나라 개인소득세는 가구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한 가구에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삼아 개인별 소득에 부과하는 개인단위 과세를 기본으로 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최종단계의 부가가치에만 과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생산·유통의 각 거래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며 매입세액공제로 누적과세를 피하므로, 기업의 수직적 통합 여부에 대해 중립적이다. 올바르게는 '각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에 과세되어 수직적 통합을 유발하지 않는다'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비례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성을 개선'한다는 부분이다. 비례소득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평균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더 높은 부담률을 지우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누진소득세가 담세력이 큰 사람에게 더 높은 부담률을 적용하여 수직적 공평성을 개선한다'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떨어뜨린다'이다. 이자소득세로 세후이자율이 하락하면 대체효과는 미래소비보다 현재소비를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저축을 감소시키지만, 저축자의 소득효과는 실질적인 생애자산 감소를 보전하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현재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증가시킨다. 올바르게는 '대체효과는 저축을 감소시키고, 소득효과는 저축을 증가시킨다'이다.

### 오답 포인트

③은 부가가치세의 최종 부담자가 소비자라는 사실을 '최종단계에만 과세한다'는 뜻으로 바꾼 함정이다. ⑤는 세후이자율 하락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방향을 서로 뒤바꾼 함정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득세 선지는 과세단위와 세율구조를 먼저 구분하고, 부가가치세 선지는 '각 단계 과세·매입세액공제·최종소비자 부담'을 함께 확인한다. 이자율 변화와 저축 문제에서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나누어 방향을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개인소득세는 개인단위, 부가가치세는 각 단계의 부가가치, 이자소득세는 저축의 대체효과 감소·소득효과 증가이다.

NoteBase

**문 8. 조세지출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ㄴ. 법인세 특별감가상각
ㄷ. 조세수입으로 확보된 재정의 지출
ㄹ. 투자세액공제
ㅁ. 공해배출기업에 대한 환경세 부과
ㅂ. 기부행위에 대한 소득공제

① ㄱ, ㄷ, ㅁ
② ㄱ, ㄷ, ㅂ
③ ㄴ, ㄹ, ㅂ
④ ㄷ, ㄹ, ㅁ
⑤ ㄹ, ㅁ, ㅂ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조세지출과 직접적인 재정지출·조세 부과를 구별하고, 세금 감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가려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세지출은 특정 납세자나 경제활동에 공제·감면·우대세율·과세이연 등의 조세상 특례를 주어 세수를 줄이는 방식의 간접 지원이다.
ㄴ의 법인세 특별감가상각은 감가상각을 앞당겨 법인세 부담을 이연·경감하므로 조세지출이다.
ㄹ의 투자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빼 주므로 조세지출이다.
ㅂ의 기부행위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 부담을 낮추므로 조세지출이다.
반면 ㄱ의 보조금과 ㄷ의 재정지출은 정부가 예산을 실제로 지출하는 직접지출이고, ㅁ의 환경세 부과는 세 부담을 늘리는 조세 부과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ㄷ은 직접적인 재정지출이고 ㅁ은 환경세 부과이므로 모두 조세지출이 아니다. 틀린 묶음이며, 올바르게는 ㄴ, ㄹ, ㅂ이다.
② X — ㄱ과 ㄷ은 직접지출이므로 조세지출이 아니고, ㅂ만 소득공제를 통한 조세지출이다. 틀린 묶음이며, 올바르게는 ㄴ, ㄹ, ㅂ이다.
③ O — 특별감가상각, 투자세액공제, 기부행위 소득공제는 모두 조세상 특례로 세 부담을 줄이는 조세지출이다.
④ X — ㄹ만 조세지출이고, ㄷ은 직접적인 재정지출이며 ㅁ은 환경세 부과이다. 틀린 묶음이며, 올바르게는 ㄴ, ㄹ, ㅂ이다.
⑤ X — ㄹ과 ㅂ은 조세지출이지만 ㅁ은 세 부담을 늘리는 환경세 부과이므로 조세지출이 아니다. 틀린 묶음이며, 올바르게는 ㄴ, ㄹ, ㅂ이다.

### 오답 포인트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정책수단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보조금·일반 재정지출·환경세까지 조세지출로 묶기 쉽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돈을 직접 지급하거나 세금을 새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특례로 거둘 세금을 덜 걷는 방식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제·감면·특별상각처럼 세 부담을 줄이거나 납부를 미루게 하면 조세지출로 판단한다. 보조금처럼 예산에서 돈을 지급하면 직접지출이고, 환경세처럼 세금을 부과하면 조세수입 수단이므로 제외한다.

### 암기 포인트

조세지출은 ‘돈을 주는 지출’이 아니라 ‘받을 세금을 덜 받는 지출’이다. 특별감가상각·세액공제·소득공제가 대표적이다.

NoteBase

**문 9. 다음 중 탈세의 부정적 효과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원배분의 왜곡 초래
ㄴ. 지하경제 비대
ㄷ. 조세부담의 불공평 초래
ㄹ. 경제정책 효과의 불확실 초래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탈세가 자원배분, 지하경제, 조세부담의 공평성, 경제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빠짐없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탈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부담해야 할 조세를 불법적으로 회피하는 행위이다. 탈세가 존재하면 세금을 피하기 위한 비생산적 활동이 늘어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거래가 공식 경제에서 벗어나 지하경제가 커진다. 또한 성실 납세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어 조세부담의 공평성이 훼손되며, 세수와 경제정보가 부정확해져 경제정책 효과의 예측 가능성도 낮아진다. 따라서 ㄱ, ㄴ, ㄷ, ㄹ은 모두 탈세의 부정적 효과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ㄴ·ㄷ은 모두 부정적 효과이지만, 경제정책 효과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ㄹ이 빠져 있어 불완전하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② X — ㄱ·ㄴ·ㄹ은 모두 부정적 효과이지만,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는 ㄷ이 빠져 있어 불완전하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③ X — ㄱ·ㄷ·ㄹ은 모두 부정적 효과이지만, 지하경제를 비대하게 하는 ㄴ이 빠져 있어 불완전하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④ X — ㄴ·ㄷ·ㄹ은 모두 부정적 효과이지만,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ㄱ이 빠져 있어 불완전하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⑤ O — ㄱ의 자원배분 왜곡, ㄴ의 지하경제 비대, ㄷ의 조세부담 불공평, ㄹ의 경제정책 효과 불확실은 모두 탈세의 부정적 효과이므로 네 항목을 전부 고른 조합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④의 개별 항목은 틀린 내용이 아니라 모두 옳은 내용이다. 함정은 각 조합이 부정적 효과 하나씩을 누락했다는 점이다. 특히 ㄹ은 탈세가 세수와 경제정보를 왜곡하여 정책 효과를 불확실하게 만든다는 간접 효과이므로 빠뜨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탈세의 영향을 효율성, 공식 경제의 규모, 공평성, 정책 수행의 네 측면으로 나누어 확인한다. 자원배분 왜곡은 효율성, 지하경제 비대는 공식 경제의 축소, 조세부담 불공평은 공평성, 정책 효과 불확실은 정책 수행의 문제에 각각 해당한다.

**암기 포인트**

탈세의 네 가지 폐해는 자원배분 왜곡·지하경제 비대·조세불공평·정책불확실이다.

NoteBase

**문 10.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②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면 노동공급은 줄어든다.

③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④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⑤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정액세(lump-sum tax)를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하여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근로소득세가 순임금률과 실질소득을 변화시킬 때 여가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방향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체효과는 순임금률이 낮아지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낮아져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을 줄이는 효과이다.
소득효과는 실질소득 변화에 따라 여가 수요가 달라지는 효과이다. 여가가 정상재이면 소득 감소로 여가가 줄어 노동공급이 늘지만, 여가가 열등재이면 소득 감소로 여가가 늘어 노동공급이 줄어든다. 정액세는 순임금률을 바꾸지 않으므로 대체효과 없이 소득효과만 발생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여가가 정상재일 때 임금 상승의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인다.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임금이 상승해도 노동공급이 감소하므로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한다.
② O. 비례소득세는 순임금률을 낮춘다. 이때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고, 여가가 정상재일 때의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린다.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으면 순효과로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이다. 누진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하므로 비례소득세보다 고소득자의 순임금률과 노동 유인을 더 크게 낮출 수 있어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④ O. 여가가 열등재이면 소득 감소의 소득효과도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을 줄인다. 비례소득세로 순임금률이 하락할 때 대체효과 역시 노동공급을 줄이므로 두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⑤ O. 정액세는 순임금률을 바꾸지 않아 소득효과만 발생한다. 여가가 열등재일 때 세금으로 소득이 감소하면 여가 수요가 늘어나므로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비례소득세 부과에 따른 순임금률 하락과 일반적인 임금 상승을 같은 방향으로 해석하면 ②와 ④를 혼동하기 쉽다. 또한 누진세가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③의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와 뒤바꾸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세금이 순임금률을 바꾸는지 확인한다. 순임금률이 하락하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 감소 방향이다. 그다음 여가가 정상재이면 소득효과는 노동공급 증가, 열등재이면 노동공급 감소 방향으로 표시하여 두 효과의 크기와 방향을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비례세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정액세는 소득효과만 발생한다. 여가가 정상재이면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고, 열등재이면 세금 부과 시 두 효과가 모두 노동공급 감소 방향이다.

NoteBase

**문 11. 시점간(inter-temporal) 소비선택 모형에서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며, 미래소득은 영(0)이다. 그리고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① 이자소득세 부과 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② 이자소득세 부과 시 저축은 반드시 감소하게 된다.

③ 이자소득세 부과 시 민간저축은 감소하나 총저축의 증감여부는 불분명하다.

④ 현재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⑤ 미래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자소득세로 세후이자율이 하락할 때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에 나타나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방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면 세후이자율이 하락하여 현재소비의 미래소비에 대한 상대가격이 낮아진다. 따라서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늘리고 미래소비를 줄인다. 한편 저축자는 세후이자소득 감소로 실질적인 평생소득이 줄어든다. 두 소비가 모두 정상재이므로 이 소득효과는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를 모두 줄인다. 결국 현재소비는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어서 증감이 불분명하지만, 미래소비는 두 효과가 모두 감소 방향이어서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상승'이다. 세후이자율이 하락하면 현재소비 한 단위를 위해 포기하는 미래소비가 줄어들므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하락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저축은 반드시 감소'이다. 저축은 현재소득에서 현재소비를 뺀 것이므로, 현재소비의 변화가 불분명한 이상 저축의 증감도 불분명하다.
③ X — 틀린 표현은 '민간저축은 감소'라고 단정한 부분이다. 현재소비에 대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반대 방향이므로 민간저축의 증감은 불분명하다. 따라서 '민간저축의 증감은 불분명하며 총저축도 반드시 한 방향으로 단정할 수 없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④ O —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늘리지만, 정상재에 대한 소득효과는 현재소비를 줄인다.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므로 현재소비의 최종 변화는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⑤ X — 틀린 표현은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부분이다. 미래소비에 대해서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감소 방향이므로 미래소비는 감소한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세후이자율 하락이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에 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함정이다. 현재소비에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충돌하지만, 미래소비에는 두 효과가 모두 감소 방향으로 작용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금 부과로 세후이자율이 하락하면 먼저 대체효과를 '현재소비 증가·미래소비 감소'로 잡는다. 이어 저축자의 평생소득 감소와 정상재 조건을 적용하여 소득효과를 '현재소비 감소·미래소비 감소'로 잡는다. 두 방향을 합치면 현재소비와 저축은 불분명하고 미래소비는 감소한다.

### 암기 포인트

세후이자율 하락: 현재소비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충돌하고, 미래소비는 두 효과가 모두 감소 방향이다.

NoteBase

**문 12. 한계실효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투자수익에 조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한계실효세율은 0이다.
ㄴ. 한계실효세율이 낮을수록 투자에 유리하다.
ㄷ. 한계실효세율이 음(-)인 경우, 조세가 투자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세가 한계투자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한계실효세율의 부호와 투자 유인의 관계를 묻는다.

**핵심 개념**

한계실효세율은 한계투자의 세전수익률과 세후수익률 사이의 조세 쐐기를 세전수익률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세전수익률을 $r_b$, 세후수익률을 $r_a$라고 하면 $METR = (r_b - r_a)/r_b$로 이해할 수 있다.
ㄱ: 투자수익에 조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r_b = r_a$이므로 한계실효세율은 0이다.
ㄴ: 한계실효세율이 낮을수록 조세로 인한 수익률의 감소가 작으므로 투자가 유리하다.
ㄷ: 한계실효세율이 음수이면 세후수익률이 세전수익률보다 높아지는 보조 효과가 나타나므로 조세제도가 투자를 촉진한다. 따라서 ㄱ, ㄴ, ㄷ이 모두 옳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옳지만, 옳은 ㄴ과 ㄷ을 빠뜨린 조합이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을 모두 골라야 한다.
② X — ㄱ과 ㄴ은 옳지만, 음의 한계실효세율이 투자 촉진 효과를 뜻한다는 ㄷ도 옳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다.
③ X — ㄱ과 ㄷ은 옳지만, 한계실효세율이 낮을수록 투자에 유리하다는 ㄴ도 옳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다.
④ X — ㄴ과 ㄷ은 옳지만, 투자수익에 조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한계실효세율이 0이라는 ㄱ도 옳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다.
⑤ O — ㄱ, ㄴ, ㄷ이 모두 한계실효세율의 정의와 부호에 따른 투자 효과에 부합한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ㄷ의 '음(-)'을 단순히 불리한 상태로 오해하기 쉽다. 한계실효세율이 음수라는 것은 조세 쐐기가 반대로 작용하여 세후수익률이 세전수익률보다 높아지는 보조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계실효세율의 부호를 조세 쐐기의 방향과 연결한다. 0이면 세전수익률과 세후수익률이 같고, 양수이면 조세가 투자수익을 낮추며, 음수이면 조세제도가 보조 효과를 내어 투자를 촉진한다.

### 암기 포인트

한계실효세율은 낮을수록 투자에 유리하며, 0은 조세 쐐기 없음, 음수는 투자 보조 효과이다.

NoteBase

**문 13. 자본의 사용자 비용(user cost of capital)을 낮추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조세정책이 아닌 것은?**

① 가속상각제도
② 투자세액공제
③ 특정기간조세 감면
④ 법인세율 인하
⑤ 근로소득세 감면

**정답 5번**

### 출제 포인트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낮추어 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이는 조세정책과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정책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기업이 자본 한 단위를 보유·사용할 때 부담하는 실질적인 비용이다. 투자 관련 공제나 감면, 가속상각, 법인세율 인하는 자본의 세후 비용 또는 투자세 부담을 낮춰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반면 근로소득세 감면은 노동소득의 세후 보상을 높이는 정책이므로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직접 낮추는 수단이 아니다.

### 선지별 해설

① O — 가속상각제도는 감가상각비를 자산 취득 초기에 더 많이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납부를 뒤로 미룬다. 감가상각공제의 현재가치가 커지므로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
② O —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액의 일정 부분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투자에 따른 실질적 세 부담을 줄이므로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낮춘다.
③ O — 특정 기간의 조세 감면은 해당 기간 투자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을 줄여 세후 투자수익을 높이므로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낮추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④ O —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수익에 부과되는 세 부담을 낮춰 세후 수익성을 높이므로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낮추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⑤ X — 틀린 부분은 '근로소득세 감면'이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낮춘다는 점이다. 근로소득세 감면은 근로자의 세후 임금과 노동공급 유인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며,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직접 낮추려면 투자세액공제처럼 자본투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어야 한다.

### 오답 포인트

모든 감세가 기업의 투자를 직접 촉진한다고 생각하면 ⑤를 고르기 어렵다. ⑤의 '근로소득'은 생산요소 중 노동에 대한 소득이고, 나머지 선지는 자본투자 또는 법인 단계의 세 부담을 줄이는 수단이라는 차이가 핵심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책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을 확인한다. 감가상각, 투자액, 법인소득처럼 자본투자와 연결된 세 부담을 줄이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은 노동의 세후 보상에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자본 사용자비용은 가속상각·투자세액공제·법인세 감면과 연결되고, 근로소득세 감면은 노동과 연결된다.

NoteBase

**문 14. 모딜리아니-밀러(Modigliani-Miller)의 제1명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 명제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 자본구조의 존재를 증명한 것이다.
ㄴ. 이 명제에서는 기업의 수익에 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ㄷ. 이 명제에서는 경영자가 주주의 재산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가정하고 있다.
ㄹ. 이 명제에서는 모든 투자자와 경영자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가정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모딜리아니-밀러의 제1명제가 말하는 자본구조 무관련성과 그 성립 가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모딜리아니-밀러의 제1명제는 완전자본시장 등의 가정 아래 기업가치가 부채와 자기자본의 구성 방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명제이다.
ㄱ X: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유일한 최적 자본구조가 존재한다는 명제가 아니라, 자본구조와 기업가치가 무관하다는 명제이다.
ㄴ O: 기본적인 제1명제는 기업의 수익에 조세가 과세되지 않는 무세금 상황을 가정한다.
ㄷ O: 경영자는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도록 행동하여 경영자와 주주의 이해가 일치한다고 가정한다.
ㄹ O: 모든 투자자와 경영자가 같은 정보를 가진다는 정보의 대칭성을 가정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ㄴ은 옳지만 ㄱ은 틀렸고, 옳은 ㄷ과 ㄹ도 빠져 있다. ‘ㄱ, ㄴ’은 ‘ㄴ, ㄷ, ㄹ’로 고쳐야 한다.
② X — ㄴ과 ㄷ은 옳지만 정보의 대칭성을 나타내는 ㄹ이 빠져 있다. ‘ㄴ, ㄷ’은 ‘ㄴ, ㄷ, ㄹ’로 고쳐야 한다.
③ X — ㄷ과 ㄹ은 옳지만 무세금 가정인 ㄴ이 빠져 있다. ‘ㄷ, ㄹ’은 ‘ㄴ, ㄷ, ㄹ’로 고쳐야 한다.
④ O — ㄴ, ㄷ, ㄹ은 모두 제1명제의 성립 가정에 해당하고, 최적 자본구조의 존재를 주장하는 ㄱ은 제외되어 있다.
⑤ X — ㄴ, ㄷ, ㄹ은 옳지만 ㄱ이 포함되어 있다. ‘ㄱ, ㄴ, ㄷ, ㄹ’은 ‘ㄴ, ㄷ, ㄹ’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ㄱ의 '최적 자본구조의 존재를 증명'이라는 표현이 핵심 함정이다. 제1명제의 결론은 특정 자본구조가 최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성립하면 어느 자본구조를 택해도 기업가치가 같다는 자본구조 무관련성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1명제는 먼저 '자본구조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잡고, 조세 없음·이해상충 없음·정보 비대칭 없음 등 현실의 마찰을 제거한 가정을 고른다. 최적 부채비율이나 유일한 최적 자본구조를 제시하는 문장은 배제한다.

**암기 포인트**

MM 제1명제 = 완전자본시장에서는 자본구조가 달라도 기업가치는 같다. 이 문항의 가정은 무세금·주주 부극대화·동일 정보이다.

NoteBase

**문 15.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화주의학파는 국채발행이 구축효과를 가져와서 총수요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② 케인즈학파는 국채발행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도 총수요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③ 리카르도(D. Ricardo)는 재정적자를 국채로 충당하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④ 배로(R. Barro)는 정부지출이 일정하다면 재정적자를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⑤ 러너(A. Lerner)는 외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재정적자를 조세 감면과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때 총수요와 세대 간 부담이 어떻게 달라진다고 보는지 각 학파·학자의 주장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통화주의학파: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율 상승과 민간투자 감소, 즉 구축효과 때문에 재정정책의 총수요 확대 효과가 상쇄된다고 본다.
케인즈학파: 조세를 줄이고 국채를 발행하면 현재의 가처분소득과 소비가 늘어 총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본다.
리카르도·배로: 정부지출이 일정할 때 국채는 미래의 조세 부담을 뜻하므로 합리적인 가계가 저축을 늘려 현재의 조세 감면 효과를 상쇄한다는 리카도 대등정리를 제시한다.
러너: 국내의 구성원끼리 원리금을 주고받는 내부채무와 달리, 외부채무는 원리금 상환 때 재화와 자원이 국외로 이전되므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구축효과는 국채 발행으로 이자율이 올라 민간투자가 감소하여 총수요 확대 효과를 상쇄하는 현상이다. 틀린 표현은 '구축효과를 가져와서 총수요를 증가시킨다'이며, 올바르게는 '구축효과로 총수요 확대 효과가 상쇄된다'이다.
② X — 케인즈학파에서는 국채 발행을 통한 조세 감면이 현재의 가처분소득과 소비를 늘려 총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틀린 표현은 '총수요는 변화가 없다'이며, 올바르게는 '총수요가 증가한다'이다.
③ X — 리카도 대등정리에 따르면 국채 조달은 예상되는 미래 조세를 늘리고, 가계의 저축 증가가 현재의 조세 감면에 따른 소비 증가를 상쇄하므로 총수요는 변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총수요를 감소시킨다'이며, 올바르게는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다.
④ O — 배로의 리카도 대등정리에 따르면 정부지출이 일정한 경우 조세 조달과 국채 조달은 가계가 인식하는 현재·미래 조세의 시점만 바꾼다. 국채 발행에 따른 조세 감면분만큼 민간저축이 늘어나므로 총수요는 변하지 않는다.
⑤ X — 러너는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본 대상을 내부채무로 한정하고, 외부채무는 상환 과정에서 자원이 해외로 이전되므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틀린 표현은 '외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이며, 올바르게는 '내부채무는 미래세대 전체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지만 외부채무는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리카도·배로의 대등정리를 '국채 발행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로 과장하거나, 러너의 내부채무 무부담론을 외부채무까지 확대하는 것이 함정이다. 또한 구축효과는 총수요 증가의 원인이 아니라 재정 확대 효과를 상쇄하는 경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채 조달의 효과는 '케인즈학파는 총수요 증가, 통화주의학파는 구축효과로 확대 효과 상쇄, 리카도·배로는 조달 방식과 무관하게 총수요 불변'으로 구분한다. 세대 간 부담은 러너의 '내부채무와 외부채무의 구별'을 먼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배로 = 리카도 대등정리 = 조세 조달과 국채 조달의 총수요 효과가 같음. 러너 = 내부채무는 국내 이전, 외부채무는 미래세대 부담 가능.

NoteBase

**문 16. 자연독점인 공기업의 공공요금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공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② 민간기업이 생산하고 가격규제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최적생산량 달성이 가능하다.

③ 공공서비스의 경우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를 적용하면 결손을 줄일 수 있으나, 효율적 생산량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④ 한계비용가격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의 경제적 이윤은 양(+)이 된다.

⑤ 평균비용가격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의 경제적 이윤은 음(-)이 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자연독점에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이유와 한계비용가격설정·평균비용가격설정·이부가격제도가 생산량과 공기업의 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연독점은 관련 생산량 범위에서 평균비용이 계속 하락하여 여러 기업보다 한 기업이 전체 수요를 공급하는 편이 비용이 낮은 시장이다.
한계비용가격설정은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하여 효율적 생산량을 달성하지만, 자연독점에서는 일반적으로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높아 결손이 발생한다.
평균비용가격설정은 가격을 평균비용과 같게 하여 경제적 이윤을 0으로 만들지만,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으므로 생산량은 효율적 수준보다 작다.
이부가격제도는 사용량당 가격과 고정요금을 함께 받는 방식이다. 사용량당 가격을 한계비용으로 정하고 고정요금으로 고정비용을 회수하면 효율적 이용량과 수지 보전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비용이 하락하므로 여러 기업이 나누어 생산하는 것보다 하나의 공기업이 생산하는 편이 총비용이 낮다.
② X — 틀린 표현은 '가격규제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최적생산량 달성이 가능하다'이다. 규제받지 않는 민간 독점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은 생산량을 선택하므로,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은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한다. 올바르게는 가격규제가 없으면 사회적 최적생산량을 달성하기 어렵다.
③ X — 틀린 표현은 '효율적 생산량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이다. 이부가격제도에서 사용량당 가격을 한계비용으로 정하면 효율적 이용량을 유도할 수 있고, 고정요금으로 결손을 보전할 수 있다. 올바르게는 이부가격제도를 통해 결손을 줄이면서 효율적 생산량에 도달할 수 있다.
④ X — 틀린 표현은 '경제적 이윤은 양(+)이 된다'이다. 한계비용가격설정에서는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지만 자연독점의 해당 구간에서는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크므로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진다. 올바르게는 경제적 이윤이 음(-), 즉 결손이 된다.
⑤ X — 틀린 표현은 '경제적 이윤은 음(-)이 된다'이다. 평균비용가격설정은 가격을 평균비용과 같게 정하므로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진다. 올바르게는 경제적 이윤이 0이 된다.

### 오답 포인트

④와 ⑤에서 가격설정 방식의 손익 효과를 뒤바꾸기 쉽다. 자연독점에서는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높으므로 한계비용가격은 결손, 평균비용가격은 경제적 이윤 0으로 연결된다. 또한 ③은 이부가격제도의 고정요금만 보고 효율성을 놓치게 하는 선지이다. 효율성은 사용량당 가격을 한계비용으로 정하는 부분에서 확보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자연독점 구간에서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크다는 관계를 잡는다. 그다음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으면 효율적 생산량이지만 결손, 가격이 평균비용과 같으면 경제적 이윤 0이지만 과소생산이라고 판단한다.
이부가격제도는 사용량당 가격이 효율성을, 고정요금이 비용 회수를 담당한다고 구분한다.

### 암기 포인트

자연독점은 한 기업이 저비용, 한계비용가격은 효율·적자, 평균비용가격은 수지균형·과소생산, 이부가격은 사용료로 효율·고정료로 비용 회수이다.

NoteBase

**문 17. 독점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K가스공사는 동일 비용으로 가스를 생산하여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다. 산업용 가스의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은 3이고, 가정용 가스의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라고 하자. 가정용 가스의 $m^3$당 가격이 1,200원이라면 K가스공사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용 가스의 $m^3$당 가격은? (단, 기타 비용은 0원이다.)**

① 300원

② 400원

③ 600원

④ 900원

⑤ 1,200원

**정답 4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3급 가격차별에서 각 시장의 한계수입과 공통 한계비용이 같아진다는 조건을 이용해 산업용 가스의 이윤극대화 가격을 구하는 문제이다.

### 조건 정리

가정용 시장의 수요의 가격탄력성 절댓값은 2이고 가격은 1,200원이다. 산업용 시장의 수요의 가격탄력성 절댓값은 3이다. 두 시장의 생산비용 조건이 같으므로 한계비용은 공통이며, 기타 비용은 0원이다. 구해야 할 값은 산업용 가스의 $m^3$당 가격이다.

### 사용할 공식

가격을 $P$, 한계비용을 $MC$, 수요의 가격탄력성 절댓값을 $\varepsilon$이라 하면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다음과 같다.
$\frac{P-MC}{P}=\frac{1}{\varepsilon}$
이는 시장별 한계수입 $MR=P(1-1/\varepsilon)$이 공통 한계비용 $MC$과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 계산 과정

1. 가정용 시장에 이윤극대화 조건을 적용한다.
$\frac{1{,}200-MC}{1{,}200}=\frac{1}{2}$
따라서 공통 한계비용은 $MC=600$원이다.

2. 산업용 가격을 $P_I$라 하고 산업용 시장에 같은 조건을 적용한다.
$\frac{P_I-600}{P_I}=\frac{1}{3}$

3. 식을 풀면 $3P_I-1{,}800=P_I$, $2P_I=1{,}800$이므로 $P_I=9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300원은 산업용 시장의 이윤극대화 가격이 아니다. 공통 한계비용 600원과 탄력성 3을 이윤극대화 조건에 대입하면 산업용 가격은 900원이 된다.
② X — 400원은 산업용 가격이 아니다. 탄력성이 더 큰 산업용 시장에는 가정용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하지만, 정확한 가격은 $P_I(1-1/3)=600$을 만족하는 900원이다.
③ X — 600원은 가정용 시장의 조건에서 도출되는 공통 한계비용이지 산업용 판매가격이 아니다. 산업용 판매가격은 한계비용에 가격비용마진을 반영한 900원이다.
④ O — 900원은 $MR_I=900(1-1/3)=600$원이 되어 공통 한계비용 600원과 일치하므로 이윤극대화 가격이다.
⑤ X — 1,200원은 주어진 가정용 가격이다. 수요가 더 탄력적인 산업용 시장에는 더 낮은 가격인 900원을 책정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600원을 산업용 가격으로 고르는 함정은 가정용 가격에서 구한 한계비용을 판매가격과 혼동하는 데 있다. 또한 단순히 탄력성의 역비율만 가격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 시장에서 공통 한계비용을 구한 뒤 다른 시장의 러너지수 식에 대입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장분리 가격차별 문제에서는 각 시장에 $MR=MC$를 적용한다. 가격과 탄력성이 주어진 시장에서 공통 $MC$를 먼저 구하고, 그 값을 다른 시장의 $P(1-1/\varepsilon)=MC$에 대입해 가격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가격차별에서는 수요가 덜 탄력적인 시장에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며, 모든 시장의 한계수입은 공통 한계비용과 같아진다.

NoteBase

**문 18.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 규모는 국세 규모보다 작다.

② 중앙정부는 법률로 국세를 신설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관계없이 조례로 지역에 필요한 지방세목을 신설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조정교부금제도는 상위지방자치단체가 하위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④ 지방교부세는 재원의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⑤ 부동산 경기변동은 지방재정의 규모와 안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세입 구조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성격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도 조세법률주의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과세자주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 과세요건을 법률에 근거하여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핵심 구분**

중앙정부의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모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세목·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 등을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조례는 법률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지방세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을 뿐, 법률과 무관하게 새로운 지방세목을 만들 수는 없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 우리나라 조세수입은 국세 중심의 구조이므로 지방세 규모는 국세 규모보다 작다. 2023년 지방세통계연감도 조세 총액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② X — 중앙정부가 국세를 신설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로 지방세를 정할 수 있다. 틀린 표현은 '법률에 관계없이 조례로 지역에 필요한 지방세목을 신설할 수 있다'이다. 올바른 표현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이다.
③ O — 조정교부금은 시·도 등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시·군·자치구 등 하위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배분하여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④ O — 지방교부세는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을 보완하는 재정조정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의 사용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다.
⑤ O — 취득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원이 지방세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의 변동은 지방세수의 규모와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

### 오답 포인트

②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법률에 관계없이' 세목까지 신설할 수 있는 것처럼 바꾼 선지이다. 조례 제정권과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를 창설하는 권한은 서로 다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방세 선지에서는 먼저 법률의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표현은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는 맞지만, '법률과 관계없이 세목을 신설한다'는 표현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재원을 누가 누구에게 이전하는지와 용도가 지정되는지를 함께 구분한다.

### 암기 포인트

지방세도 법률 먼저, 조례는 그 범위 안에서 정한다.

NoteBase

**문 19.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분권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앙집권화율은 중앙정부의 지출을 지방정부의 지출로 나누어 계산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을 유도한다.

③ 티부(C. Tiebout) 모형은 공공재 공급의 재원으로 재산세를 상정하고 있다.

④ 중앙집권제도에 비해 공공재와 세금에 대한 정보확보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⑤ 오우츠(W. Oates)에 의하면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방공공재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지방분권의 측정 지표와 재정분권의 효율성 논거인 티부 모형 및 오우츠의 분권화정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앙집권화율은 전체 정부지출 가운데 중앙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지방분권화율은 전체 정부지출 가운데 지방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티부 모형은 주민이 조세와 지방공공재의 묶음을 비교하여 선호에 맞는 지역으로 이동하면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본다.
오우츠의 분권화정리는 공급비용에 차이가 없고 지역 간 외부효과가 없는 등의 조건에서 지역별 선호에 맞춘 지방정부의 공급이 중앙정부의 획일적 공급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논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중앙정부의 지출을 지방정부의 지출로 나누어 계산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중앙집권화율은 (중앙정부의 지출)/(전체 정부의 지출)로 계산한다. 따라서 중앙정부 지출과 지방정부 지출의 단순한 비율이 아니다.
② O - 지방정부가 주민과 세원을 유치하려 경쟁하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려는 유인이 생기므로 생산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③ O - 티부 모형은 주민이 지방공공재와 지방세의 묶음을 선택한다고 보며, 지방공공재의 재원으로 재산세를 상정한다.
④ O - 지방분권하에서는 주민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공재와 조세의 묶음을 비교해야 하므로,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보다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비용이 커질 수 있다.
⑤ O - 오우츠의 분권화정리에 따르면 공급비용이 동일하고 지역 간 외부효과가 없는 등의 조건에서는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서로 다른 선호에 맞추어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분모를 '지방정부 지출'로 바꾸어 중앙집권화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단순 지출비로 보이게 만든 선지이다. 중앙집권화율과 지방분권화율은 모두 전체 정부지출에서 각 정부 단계의 지출이 차지하는 몫으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집권화율·분권화율은 먼저 분모가 전체 정부지출인지 확인한다. 티부는 주민의 이동과 지방정부 간 경쟁, 오우츠는 지역별 선호를 반영한 지방 공급의 효율성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집권화율은 중앙 지출의 전체 대비 몫, 티부는 발로 하는 투표, 오우츠는 지역 맞춤형 공급이다.

NoteBase

**문 20. 소득세율이 소득구간에 따라 0원에서 1,200만원까지는 0%, 1,200만원 초과 3,000만원까지는 9%, 3,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18%, 5,000만원 초과부터는 27%이다. K군의 총소득 5,500만원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가능소득은 4,500만원이다. K군의 (A)한계세율과 (B)실효세율은? (단, 백분율(%)을 구할 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A: 9%, B: 7.85%

② A: 9%, B: 9.60%

③ A: 18%, B: 7.85%

④ A: 18%, B: 9.60%

⑤ A: 27%, B: 9.6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과세가능소득이 속한 최고 세율구간으로 한계세율을 판단하고, 누진적으로 계산한 총세액을 총소득으로 나누어 실효세율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총소득은 5,500만원이고 과세가능소득은 4,500만원이다.
한계세율은 과세가능소득의 마지막 1원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실효세율은 총세액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세율은 각 구간의 소득에만 적용하는 누진구조이며, 백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용할 공식**

총세액은 각 소득구간의 과세액을 합산한다.
T=1,800만원× 0.09+1,500만원× 0.18
실효세율=T총소득× 100
과세가능소득 4,500만원은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에 있으므로 마지막 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은 18%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1,2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은 0원이다.
2. 1,2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의 1,800만원에는 9%가 적용되므로 세액은 162만원이다.
3. 3,000만원 초과 4,500만원까지의 1,500만원에는 18%가 적용되므로 세액은 270만원이다.
4. 총세액은 162만원+270만원=432만원이다.
5. 실효세율은 432만원5,500만원× 100=7.8545…\%이므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7.85%이다.

따라서 한계세율은 18%, 실효세율은 7.85%이다.

**선지 판단**

① X — A의 9%가 틀렸다. 과세가능소득 4,500만원은 18% 구간에 있으므로 A는 18%가 되어야 한다. 올바르게는 ‘A: 18%, B: 7.85%’이다.
② X — A의 9%와 B의 9.60%가 모두 틀렸다. 한계세율은 18%이고, 실효세율은 총세액 432만원을 총소득 5,500만원으로 나눈 7.85%이다. 올바르게는 ‘A: 18%, B: 7.85%’이다.
③ O — 과세가능소득 4,500만원의 한계세율은 18%이고 실효세율은 7.85%이므로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④ X — B의 9.60%가 틀렸다. 9.60%는 총세액 432만원을 과세가능소득 4,500만원으로 나눈 값이지만, 이 문항의 실효세율은 총세액을 총소득 5,500만원으로 나누므로 7.85%이다. 올바르게는 ‘A: 18%, B: 7.85%’이다.
⑤ X — A의 27%와 B의 9.60%가 모두 틀렸다. 27%는 과세가능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할 때의 한계세율이고, K군의 과세가능소득은 4,500만원이므로 A는 18%이다. B는 총소득을 분모로 계산한 7.85%이다. 올바르게는 ‘A: 18%, B: 7.85%’이다.

**오답 포인트**

한계세율을 전체 소득에 적용되는 평균세율로 오해하거나, 실효세율의 분모를 과세가능소득 4,500만원으로 잡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누진세에서는 각 구간에 해당 세율을 따로 적용하며, 이 문항의 실효세율은 총세액을 공제 전 총소득으로 나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과세가능소득이 들어가는 구간에서 한계세율을 찾는다. 다음으로 각 구간별 세액을 합산해 총세액을 구하고, 실효세율의 분모가 총소득인지 과세가능소득인지 문항의 정의와 주어진 값에 따라 확인한다. 마지막에 지시된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암기 포인트**

한계세율은 마지막 소득의 세율, 실효세율은 총세액÷총소득이다.

NoteBase

**문 21. 두 소비자 1과 2가 두 재화 x와 y를 소비하는 순수교환경제를 고려하자. 소비자 1의 부존은 $(\bar{x}_1, \bar{y}_1) = (18, 12)$, 소비자 2의 부존은 $(\bar{x}_2, \bar{y}_2) = (22, 8)$이며, 소비자 $i$의 효용함수는 $u^i(x_i, y_i) = x_i y_i$ 라고 하자$(i = 1, 2)$. 다음의 배분 $((x_1, y_1), (x_2, y_2))$ 중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6,3),(34,17))
ㄴ. ((16,8),(22,11))
ㄷ. ((24,10),(16,10))
ㄹ. ((38,19),(2,1))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2번**

### 출제 포인트

총부존을 모두 사용하는 내부배분에서 두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이 같은지를 이용해 파레토 개선 가능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 조건 정리

총부존은 $x = 18 + 22 = 40, y = 12 + 8 = 20$이다.
효용함수 $u^i = x_i y_i$는 두 재화가 많을수록 효용이 증가하므로, 남는 재화가 있으면 이를 누군가에게 주어 파레토 개선을 할 수 있다.
총부존을 모두 사용하고 각 소비자가 두 재화를 양(+)으로 소비하는 배분에서는 두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이 같아야 파레토 효율적이다.

### 사용할 공식

$MU_x = y_i, MU_y = x_i$이므로
$MRS_i = \frac{MU_x}{MU_y} = \frac{y_i}{x_i}$
이다. 따라서 내부의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frac{y_1}{x_1} = \frac{y_2}{x_2}$
를 만족한다. 한계대체율이 다르면 두 소비자가 서로 다르게 평가하는 비율로 재화를 교환하여 양쪽 효용을 모두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ㄱ: 재화 합계는 (40, 20)이고, $MRS_1 = 3/6 = 1/2$, $MRS_2 = 17/34 = 1/2$이다. 총부존을 모두 사용하면서 한계대체율이 같으므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지 않다.
ㄴ: 재화 합계가 (38, 19)이므로 $x$ 2단위와 $y$ 1단위가 남는다. 남는 재화를 한 소비자에게 주면 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낮추지 않고 그 소비자의 효용을 높일 수 있으므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
ㄷ: 재화 합계는 (40, 20)이지만, $MRS_1 = 10/24 = 5/12$, $MRS_2 = 10/16 = 5/8$로 서로 다르다. 실제로 ((24, 10), (16, 10))을 ((23, 10.5), (17, 9.5))로 바꾸면 효용이 각각 240에서 241.5로, 160에서 161.5로 증가하므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
ㄹ: 재화 합계는 (40, 20)이고, $MRS_1 = 19/38 = 1/2$, $MRS_2 = 1/2 = 1/2$이다. 총부존을 모두 사용하면서 한계대체율이 같으므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지 않은 배분은 ㄱ과 ㄹ이다.

**선지 판단**

① X — ㄱ은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지 않지만 ㄴ은 재화가 남아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 ‘ㄱ, ㄴ’은 ‘ㄱ, ㄹ’로 고쳐야 한다.
② O — ㄱ과 ㄹ은 모두 총부존을 전부 사용하고 두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이 1/2로 같아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지 않다.
③ X — ㄴ은 재화가 남고, ㄷ은 두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이 달라 모두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 ‘ㄴ, ㄷ’은 ‘ㄱ, ㄹ’로 고쳐야 한다.
④ X — ㄱ과 ㄹ은 맞지만 ㄴ을 포함한 것이 틀리다. ‘ㄱ, ㄴ, ㄹ’에서 ㄴ을 제외하여 ‘ㄱ, ㄹ’로 고쳐야 한다.
⑤ X — ㄴ과 ㄷ은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고,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지 않은 ㄱ을 빠뜨렸다. ‘ㄴ, ㄷ, ㄹ’은 ‘ㄱ, ㄹ’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ㄴ은 두 소비자의 소비비율만 보면 각각 $y_i/x_i = 1/2$로 같지만 총부존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 한계대체율의 일치만 확인하고 자원 소진 조건을 빠뜨리면 ㄴ을 잘못 포함하게 된다. 또한 ㄷ은 총부존을 모두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한계대체율 때문에 상호 이익이 되는 교환이 남아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배분이 총부존을 모두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재화가 남으면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 총부존을 모두 사용하는 내부배분이면 각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을 계산하여 서로 같은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내부의 파레토 효율 조건은 ‘자원 완전 소진 + 소비자 간 한계대체율 일치’이다.

NoteBase

**문 22. 두 사람으로 구성된 어느 경제의 효용가능경계와 사회후생함수 $W^A = U_1 + U_2$의 사회무차별곡선과의 접점을 A, 사회후생함수 $W^B = \min\{U_1, U_2\}$ 의 사회무차별곡선과의 접점을 B, 사회후생함수 $W^C = U_1U_2$ 의 사회무차별곡선과의 접점을 C라고 하자. 이 접점들은 각 경우에 유일한 접점이라고 하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A와 B가 일치하면 C도 반드시 일치한다.
ㄴ. A와 C가 일치하면 B도 반드시 일치한다.
ㄷ. B와 C가 일치하면 A도 반드시 일치한다.
ㄹ. 세 접점이 모두 일치할 수는 없다.

① ㄹ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공리주의형, 롤스형, 내시형 사회후생함수가 같은 효용가능경계에서 선택하는 점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특히 매끈한 사회무차별곡선의 접선조건과 롤스형 사회무차별곡선의 꺾인 모양을 구별해야 한다.

**핵심 개념**

공리주의형 $W^A = U_1 + U_2$: 두 사람의 효용 합을 최대화하며 사회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1$이다.
롤스형 $W^B = \min\{U_1, U_2\}$: 효용이 더 낮은 사람의 효용을 최대화하며 사회무차별곡선은 $U_1 = U_2$에서 꺾인다.
내시형 $W^C = U_1U_2$: 두 사람의 효용 곱을 최대화하며 사회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U_2/U_1$이다.
ㄱ은 옳다. $S = U_1 + U_2, m = \min\{U_1, U_2\}$라 두면 비음수 효용 영역에서 $U_1U_2 = m(S - m)$이고 $0 \le m \le S/2$이다. A와 B가 같은 점이면 그 점에서 $S$와 $m$이 모두 최대이다. $m(S - m)$은 이 영역에서 $S$와 $m$이 커질수록 증가하므로 효용 곱도 그 점에서 최대가 되어 C와 일치한다.
ㄴ은 옳다. A와 C가 같은 점에서 접하면 $-1 = -U_2/U_1$이므로 $U_1 = U_2$이다. 이 점은 두 사람 중 낮은 효용을 최대화하는 B와도 일치한다.
ㄷ은 옳지 않다. 롤스형 무차별곡선은 꺾여 있으므로 B에서는 공리주의형의 기울기 $-1$이 접선기울기로 강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B와 C가 같더라도 A가 다른 점일 수 있다.
ㄹ도 옳지 않다. ㄱ 또는 ㄴ의 관계처럼 세 접점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ㄹ은 '세 접점이 모두 일치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세 접점은 모두 일치할 수 있다. 올바르게는 '세 접점이 모두 일치할 수 있다'이다.
② O — ㄱ과 ㄴ이 모두 옳고, ㄷ과 ㄹ은 옳지 않으므로 옳은 진술을 빠짐없이 고른 조합이다.
③ X — ㄷ을 포함한 것이 틀렸고, 옳은 ㄴ을 제외했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④ X — ㄷ을 포함한 것이 틀렸고, 옳은 ㄱ을 제외했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⑤ X — ㄷ까지 옳다고 본 것이 틀렸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오답 포인트**

B와 C가 일치하면 C의 접선조건 때문에 A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B의 롤스형 사회무차별곡선은 꺾여 있어 B와 C의 일치만으로 효용가능경계의 기울기가 $-1$이라고 결론 낼 수 없다. 반면 A와 C가 일치하면 두 매끈한 사회무차별곡선의 기울기를 직접 비교할 수 있어 $U_1 = U_2$가 도출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와 C의 일치에서는 $-1 = -U_2/U_1$을 적용해 $U_1 = U_2$를 먼저 확인한다. B가 포함된 역방향 명제에서는 롤스형 곡선의 꺾인 점 때문에 통상적인 접선조건을 역으로 적용할 수 없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A와 C의 같은 접점은 효용평등을 뜻하지만, B와 C의 같은 접점만으로 A까지 같다고 할 수는 없다. ㄱ·ㄴ은 O, ㄷ·ㄹ은 X이다.

NoteBase

**문 23. 후생경제학의 기본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1정리는 완전경쟁시장에서 개인의 이기적인 선택의 결과가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ㄴ. 제2정리는 효율성이 공평한 자원배분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ㄷ.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와 제2정리의 결론은 소비자 선호의 볼록성과 무관하게 성립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와 제2정리가 각각 효율성과 분배에 관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각 정리에 필요한 볼록성 조건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제1정리: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완전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정리이다. 개인의 분권화된 선택과 시장가격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룰 수 있음을 뜻한다.
제2정리: 선호와 생산기술의 볼록성 등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임의의 파레토 효율적 배분을 적절한 초기부존의 재분배 후 경쟁균형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정리이다. 효율성이 공평성을 자동으로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다.
볼록성: 제1정리의 일반적인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지만, 제2정리에서 효율적 배분을 경쟁균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 ㄱ만 옳다. 제1정리는 완전경쟁시장에서 개인의 이기적인 효용·이윤 극대화 선택이 시장을 통해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한다.
② X — ㄴ은 틀리다. 틀린 표현은 '효율성이 공평한 자원배분을 보장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제2정리는 적절한 초기부존의 재분배가 선행되면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원하는 파레토 효율적 배분을 경쟁균형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③ X — ㄱ은 옳지만 ㄴ이 틀리므로 옳은 진술의 조합이 아니다. ㄴ은 '효율성이 공평성을 보장한다'가 아니라 '분배 목표를 초기부존의 재분배로 반영한 뒤 시장을 통해 효율적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 ㄱ은 옳지만 ㄷ이 틀리므로 옳은 진술의 조합이 아니다. ㄷ의 '제1정리와 제2정리의 결론은 소비자 선호의 볼록성과 무관하게 성립한다'는 표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제1정리는 일반적으로 볼록성을 필수로 하지 않지만 제2정리는 소비자 선호와 생산가능집합의 볼록성 등 볼록성 조건을 필요로 한다.
⑤ X — ㄴ과 ㄷ이 모두 틀리므로 옳은 진술의 조합이 아니다. ㄴ은 제2정리가 공평성을 자동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며, ㄷ은 적어도 제2정리의 성립에는 볼록성 조건이 중요하다고 고쳐야 한다.

### 오답 포인트

ㄴ의 함정은 제2정리가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자동 달성한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데 있다. 제2정리는 공평한 분배 기준을 정해 주는 정리가 아니라, 사회가 선택한 효율적 배분을 초기부존의 재분배와 경쟁시장으로 구현할 수 있음을 말한다. ㄷ에서는 제1정리와 제2정리의 가정을 한꺼번에 같다고 보는 것이 함정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1정리는 '경쟁균형에서 효율성으로', 제2정리는 '효율적 배분에서 재분배 후 경쟁균형으로' 향한다고 구분한다. 공평성은 시장이 자동 보장하는 결과가 아니라 초기부존의 재분배 단계에서 반영되며, 볼록성은 특히 제2정리의 핵심 조건으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제1정리는 경쟁균형 → 효율성, 제2정리는 재분배한 효율점 → 경쟁균형이다. 공평성은 자동 보장이 아니며, 볼록성은 제2정리의 핵심 조건이다.

NoteBase

**문 24.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양봉업자가 생산하는 벌꿀에 대한 수요함수가 $Q = 10 - 2P$이고, 외부한계편익함수는 $Q = 5 - 2P$이다. 한계생산비용이 4라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① 2
② 3.5
③ 4
④ 5
⑤ 1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긍정적 외부성이 있을 때 사적 한계편익과 외부한계편익을 합한 사회적 한계편익을 한계생산비용과 일치시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사적 한계편익: 수요함수 $Q = 10 - 2P$의 역함수
외부한계편익: $Q = 5 - 2P$의 역함수
한계생산비용: $MC = 4$
구해야 할 값: 사회적 한계편익과 한계생산비용이 같아지는 생산량 $Q$

**사용할 공식**

$SMB = PMB + EMB$
$SMB = MC$

긍정적 외부성이 있으므로 소비자가 직접 얻는 사적 한계편익뿐 아니라 제3자가 얻는 외부한계편익도 사회적 편익에 포함한다.

**계산 과정**

1. 사적 수요함수를 가격에 대해 풀면 $PMB = P = 5 - \frac{1}{2}Q$이다.
2. 외부한계편익함수를 가격에 대해 풀면 $EMB = P = \frac{5}{2} - \frac{1}{2}Q$이다.
3. 두 한계편익을 더하면 $SMB = \frac{15}{2} - Q$이다.
4. 사회적 최적 조건을 적용하면 $\frac{15}{2} - Q = 4$이므로 $Q = \frac{7}{2} = 3.5$이다.

NoteBase

### 선지 판단

① X — 생산량 2는 사적 한계편익만 한계생산비용과 같게 한 시장생산량이다. 외부한계편익까지 포함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3.5이다.
② O — $SMB = MC$를 풀면 $Q = 3.5$이므로 옳다.
③ X — 4는 주어진 한계생산비용의 수치이지 생산량이 아니다. 올바른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3.5이다.
④ X — $Q = 5$이면 $SMB = 2.5$로 $MC = 4$보다 작으므로 사회적 최적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올바른 생산량은 3.5이다.
⑤ X — 10은 사적 수요함수의 가격이 0일 때의 수요량이며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아니다. 올바른 생산량은 3.5이다.

### 오답 포인트

긍정적 외부성을 무시하고 $PMB = MC$만 적용하면 생산량 2가 나와 ①을 고르게 된다. 또한 두 함수가 모두 수량에 관해 제시되어 있으므로 각각 역수요함수로 바꾼 뒤 편익을 세로로 합해야 한다. 수량식을 그대로 더하거나 한계생산비용 4를 생산량으로 읽으면 안 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긍정적 외부성 문제에서는 먼저 각 편익함수를 가격에 대한 역함수로 바꾸고, $SMB = PMB + EMB$를 만든 다음 $SMB = MC$를 풀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구한다.

### 암기 포인트

긍정적 외부성: $SMB = PMB + EMB$, 사회적 최적: $SMB = MC$이다.

NoteBase

**문 25.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충분조건이다.
ㄴ. 자연독점에 대한 평균비용가격설정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다.
ㄷ. 정액세(lump-sum tax)는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는다.
ㄹ. 사회보험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ㅁ.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의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ㄷ, ㅁ
⑤ ㄹ, ㅁ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시장실패의 원인과 정부개입의 한계, 자연독점의 가격규제, 정액세, 사회보험, 공공재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장실패는 시장기구만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상태이지만, 그 자체가 정부개입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정부개입의 편익이 비용과 정부실패 가능성보다 커야 한다.
자연독점에서 평균비용가격설정은 가격을 평균비용과 같게 하여 독점기업의 초과이윤을 없애지만,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크므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남는다.
정액세는 경제활동의 선택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과하므로 한계유인을 바꾸지 않아 대체효과에 따른 왜곡을 만들지 않는다.
사회보험은 역선택 등으로 민간보험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한다.
공공재의 핵심 성격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며, 이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ㄴ이 모두 틀리다. ㄱ의 '충분조건'이 잘못되었으며,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을 검토하게 하는 필요조건일 수 있으나 정부개입의 순편익과 정부실패까지 고려해야 한다. ㄴ의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다'도 잘못되었으며, 평균비용가격설정에서는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아 배분적 비효율이 남는다.
② X — ㄷ은 옳지만 ㄴ이 틀리다. ㄴ은 '평균비용가격설정은 독점기업의 초과이윤을 없앨 수 있으나 한계비용가격설정과 달리 배분적 비효율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 ㄷ과 ㄹ이 모두 옳다. 정액세는 납세자의 한계적 선택을 바꾸지 않아 대체효과에 따른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사회보험은 역선택과 같은 보험시장의 실패를 보완한다.
④ X — ㄷ은 옳지만 ㅁ이 틀리다. ㅁ의 '배제성과 경합성'은 반대로 표현되었으며,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때문에 무임승차가 발생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렵다'로 고쳐야 한다.
⑤ X — ㄹ은 옳지만 ㅁ이 틀리다. ㅁ은 공공재의 성격을 배제성과 경합성이 아니라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고쳐야 한다.

### 오답 포인트

ㄴ에서는 평균비용가격설정이 독점가격보다 가격을 낮춘다는 사실을 비효율의 완전한 제거로 오해하기 쉽다. 평균비용가격설정은 손실 없이 기업을 운영하게 하지만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지 않아 배분적 비효율이 남는다. ㅁ에서는 공공재의 성격 앞에 붙는 '비'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진술의 결정어를 확인한다.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충분조건이 아니고, 자연독점의 평균비용가격설정은 초과이윤을 없애지만 배분적 비효율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며, 정액세는 한계유인을 왜곡하지 않고, 사회보험은 보험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며,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다. 따라서 옳은 진술은 ㄷ과 ㄹ이다.

### 암기 포인트

시장실패≠정부개입 충분조건, 평균비용가격은 초과이윤 0·배분비효율 잔존, 정액세는 비왜곡, 사회보험은 시장실패 보완, 공공재는 비배제·비경합이다.

NoteBase

**문 26.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경합성이 강한 공공재일수록 공공재가 주는 사회적 편익의 크기가 더 커진다.

② 현실에서 대부분의 공공재는 시장이 성립되지 못하는 순수공공재이다.

③ 클럽재(club goods)는 배제성 적용이 불가능하다.

④ 모든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충족한다.

⑤ 공공재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호를 정확하게 표출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공공재의 비경합성·비배제성, 순수공공재·클럽재의 구분, 무임승차에 따른 선호표출 문제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을 줄이지 않는 성질이고, 비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성질이다. 순수공공재는 두 성질을 모두 강하게 가지지만, 현실의 공공재에는 둘 중 하나가 약한 비순수공공재도 많다. 클럽재는 배제성이 있으면서 혼잡이 발생하기 전까지 비경합적인 재화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비경합성이 강하면 같은 재화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해 편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각 소비자의 한계편익을 합산한 사회적 편익이 커질 수 있다.
② X — 틀린 표현은 '대부분의 공공재는 시장이 성립되지 못하는 순수공공재'이다. 실제 현실의 공공재에는 경합성이나 배제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비순수공공재가 많고, 배제 기술 등을 이용하여 시장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③ X — 틀린 표현은 '배제성 적용이 불가능하다'이다. 클럽재는 요금이나 회원 자격으로 비회원의 소비를 배제할 수 있는 재화이며, 혼잡 전에는 비경합성을 가진다.
④ X — 틀린 표현은 '모든 공공재'와 '동시에 충족한다'이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순수공공재이고, 넓은 의미의 공공재에는 어느 한 성질만 있거나 두 성질이 불완전한 비순수공공재도 포함된다.
⑤ X — 틀린 표현은 '선호를 정확하게 표출한다'이다. 비배제성 때문에 소비자는 대가를 내지 않고 편익을 얻으려는 무임승차 유인을 가지므로 자신의 지불의사와 선호를 실제보다 낮게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다.

**오답 포인트**

'공공재'를 모두 순수공공재로 단정하면 ②와 ④에 속기 쉽다. 또한 클럽재는 비경합성과 연결되지만 배제성은 존재한다는 점, 공공재 소비자는 무임승차 유인 때문에 선호를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재화를 경합성 여부와 배제 가능 여부의 두 축으로 나눈다. 두 성질이 모두 강하면 순수공공재, 배제 가능하고 혼잡 전 비경합적이면 클럽재로 판단하며, 비배제성이 있으면 무임승차와 선호표출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순수공공재는 비경합·비배제, 클럽재는 배제 가능·혼잡 전 비경합, 비배제성은 무임승차와 선호표출 왜곡으로 연결된다.

NoteBase

**문 27. 9명의 투표자 중 A유형은 4명, B유형은 3명, C유형은 2명이며, 이들은 네 개의 대안 a, b, c, d를 놓고 선택하고자 한다. 각 유형의 대안에 대한 선호는 다음과 같다고 하자. 보다(Borda)투표제를 실시한다면, 어느 대안이 선택되겠는가?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A[4명]: a > b > c > d
B[3명]: b > d > a > c
C[2명]: c > d > b > a

① a
② b
③ c
④ d
⑤ 투표 결과를 특정할 수 없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보다(Borda)투표제의 순위별 점수를 각 유형의 유권자 수만큼 가중하여 대안별 총점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대안은 a, b, c, d의 4개이다.
A유형 4명: a > b > c > d
B유형 3명: b > d > a > c
C유형 2명: c > d > b > a
선호 조작은 없으므로 제시된 순위를 그대로 점수화한다.

**사용할 공식**

4개 대안에 대한 보다 점수는 1순위부터 차례로 3점, 2점, 1점, 0점을 부여한다.

대안의 총점=Σ(순위 점수×해당 유형의 유권자 수)

보다투표제는 각 대안이 모든 유권자의 순위에서 받은 점수를 합산하고, 그 총점이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a의 총점: $4 \times 3 + 3 \times 1 + 2 \times 0 = 15$점
b의 총점: $4 \times 2 + 3 \times 3 + 2 \times 1 = 19$점
c의 총점: $4 \times 1 + 3 \times 0 + 2 \times 3 = 10$점
d의 총점: $4 \times 0 + 3 \times 2 + 2 \times 2 = 10$점

총점은 b가 19점으로 가장 높으므로 b가 선택된다.

**선지 판단**

① X
- a의 총점은 15점으로 b의 19점보다 낮다. 틀린 표현 ‘a’는 ‘b’로 고쳐야 한다.

② O
- b는 A유형에서 8점, B유형에서 9점, C유형에서 2점을 받아 총 19점으로 가장 높다.

③ X
- c의 총점은 10점에 불과하다. 틀린 표현 ‘c’는 ‘b’로 고쳐야 한다.

④ X
- d의 총점은 10점에 불과하다. 틀린 표현 ‘d’는 ‘b’로 고쳐야 한다.

⑤ X
- 각 유형의 인원수와 선호 순위가 모두 주어져 있어 대안별 보다 점수를 계산할 수 있다. ‘투표 결과를 특정할 수 없다’는 표현은 ‘b가 선택된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각 유형의 선호 순위를 한 표로만 세면 안 된다. A유형은 4명, B유형은 3명, C유형은 2명이므로 순위 점수에 해당 유형의 인원수를 반드시 곱해야 한다. 또한 보다투표제는 1순위 표의 개수만 비교하는 다수결이 아니라 모든 순위의 점수를 합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안 수가 $m$개이면 1순위부터 $m-1, m-2, \ldots, 0$점을 부여하고, 각 순위 점수에 그 선호 유형의 인원수를 곱한 뒤 대안별로 합산한다. 총점이 가장 높은 대안이 보다투표제의 승자이다.

**암기 포인트**

보다투표제는 ‘순위 점수 × 인원수’를 모든 유형에 대해 합산하여 최고점을 고른다.

NoteBase

**문 28. 다음 중 소득 분배상태가 완전 균등인 경우 그 값이 0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5분위분배율
ㄴ. 10분위분배율
ㄷ. 지니계수
ㄹ. 앳킨슨지수
ㅁ. 달튼지수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ㄷ, ㄹ, ㅁ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소득분배지표마다 완전균등 상태를 나타내는 기준값이 다르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지니계수와 앳킨슨지수는 0, 5분위분배율과 달튼지수는 1, 10분위분배율은 2가 완전균등 상태이다.

**핵심 개념**

5분위분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이므로 완전균등하면 1이다.
10분위분배율은 하위 40%의 소득점유율을 상위 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이므로 완전균등하면 2이다.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과 완전균등선 사이의 면적을 이용한 불평등지수이므로 완전균등하면 0이다.
앳킨슨지수는 불평등 때문에 발생하는 후생손실의 비율을 나타내므로 완전균등하면 0이다.
달튼지수는 실제 소득분배의 사회후생을 같은 평균소득을 균등하게 분배했을 때의 최대 사회후생으로 나눈 평등지수이므로 완전균등하면 1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ㄴ은 모두 완전균등할 때 0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ㄱ, ㄴ'이며, 올바르게는 0이 되는 지표인 'ㄷ, ㄹ'을 골라야 한다.
② X — ㄷ은 0이지만 ㄴ은 완전균등할 때 2이고, 0인 ㄹ이 빠져 있다. 틀린 표현은 'ㄴ, ㄷ'이며, 올바르게는 'ㄷ, ㄹ'이다.
③ O — 지니계수와 앳킨슨지수는 불평등이 전혀 없을 때 모두 0이다.
④ X — ㄱ은 1, ㄴ은 2, ㄹ은 0이므로 세 항목을 모두 고를 수 없다. 틀린 표현은 'ㄱ, ㄴ, ㄹ'이며, 올바르게는 'ㄷ, ㄹ'이다.
⑤ X — ㄷ과 ㄹ은 0이지만 달튼지수인 ㅁ은 완전균등할 때 1이다. 틀린 표현은 'ㄷ, ㄹ, ㅁ'이며, 올바르게는 'ㄷ, ㄹ'이다.

**오답 포인트**

불평등이 없으면 모든 분배지표가 0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비율형 지표와 평등지수는 기준값이 다르다. 특히 달튼지수는 후생손실을 0으로 표시하는 앳킨슨지수와 달리 실제 사회후생이 균등분배 시 최대 사회후생과 같아지는지를 비율로 나타내므로 완전균등값이 1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지표가 불평등의 크기나 후생손실을 재는지, 두 집단의 소득점유율 또는 실제 후생과 최대 후생의 비율을 재는지 구분한다. 전자는 완전균등값이 0이고, 후자는 분자와 분모의 구성에 따라 1 또는 2가 된다.

**암기 포인트**

완전균등 기준값은 5분위분배율 1, 10분위분배율 2, 지니계수 0, 앳킨슨지수 0, 달튼지수 1이다.

NoteBase

**문 29.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 정부가 교정세를 부과하여도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없다.

②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은 외부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③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④ 어떤 행동이 상대가격의 변동을 가져와서 발생하는 외부성을 금전적 외부성이라 한다.

⑤ 양봉업자가 인근 과수원의 생산에 영향을 준 것은 기술적 외부성에 해당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외부성의 교정수단과 긍정적 외부성·금전적 외부성·기술적 외부성의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부성은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시장가격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이나 생산에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이 보상되지 않는 현상이다. 부정적 외부성에는 한계외부비용만큼의 교정세를 부과하여 사적 한계비용을 사회적 한계비용과 일치시키면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금전적 외부성은 상대가격의 변화를 통해 다른 주체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기술적 외부성은 효용이나 생산함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교정세를 부과하여도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없다'이다. 부정적 외부성의 한계외부비용과 같은 크기의 교정세를 부과하면 외부비용이 의사결정에 반영되므로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② O — 연구개발의 성과와 지식은 다른 기업이나 연구자에게 확산되어 보상 없이 편익을 줄 수 있으므로 긍정적 외부성을 가진다.

③ O —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권리의 귀속이 분명해야 당사자들이 외부성에 관한 권리를 거래하고 협상할 수 있다. 또한 거래비용이 없거나 매우 작아야 한다는 조건도 중요하다.

④ O —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상대가격을 변화시켜 다른 주체에게 영향을 주는 외부성은 금전적 외부성이다. 이는 효용이나 생산기술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기술적 외부성과 구별된다.

⑤ O — 양봉업자의 벌이 과수원의 수분을 도와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과수원의 생산함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긍정적 기술적 외부성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함정은 교정세가 언제나 실패한다고 단정한 '이룰 수 없다'이다. 교정세는 세율을 한계외부비용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면 시장행위자가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회복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정적 외부성의 교정세는 한계외부비용만큼 부과하는지 확인한다. 가격을 매개로 한 영향은 금전적 외부성, 효용이나 생산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기술적 외부성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부정적 외부성은 교정세로 내부화하고, 가격을 통한 영향은 금전적 외부성, 생산·효용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기술적 외부성이다.

NoteBase

**문 30. 세 투표자 A, B, C가 세 가지 대안 a, b, 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꽁도세 승자(Condorcet winner)는?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A: a > b > c
B: b > c > a
C: c > b > a

① a
② b
③ c
④ a, b, c
⑤ 투표의 역설로 꽁도세 승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각 대안을 일대일로 비교하는 쌍대다수결에서 다른 모든 대안을 이기는 꽁도세 승자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꽁도세 승자는 다른 모든 대안과 각각 일대일로 대결했을 때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 승리하는 대안이다.
a 대 b: A는 a, B와 C는 b를 선호하므로 b가 2 대 1로 이긴다.
a 대 c: A는 a, B와 C는 c를 선호하므로 c가 2 대 1로 이긴다.
b 대 c: A와 B는 b, C는 c를 선호하므로 b가 2 대 1로 이긴다.
따라서 b는 a와 c를 모두 이기므로 꽁도세 승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a는 b와의 대결에서 1 대 2로 지고, c와의 대결에서도 1 대 2로 진다. 틀린 표현은 ‘a가 꽁도세 승자’라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a가 어느 상대에게도 이기지 못한다고 해야 한다.
② O — b는 a와의 대결에서 B와 C의 지지로 2 대 1, c와의 대결에서 A와 B의 지지로 2 대 1로 이긴다. 따라서 b가 꽁도세 승자이다.
③ X — c는 a를 2 대 1로 이기지만 b에게는 1 대 2로 진다. 틀린 표현은 ‘c가 꽁도세 승자’라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c가 a만 이기고 b에게는 진다고 해야 한다.
④ X — a, b, c가 모두 꽁도세 승자라는 판단은 틀리다. 올바르게는 다른 두 대안을 모두 이기는 b만 꽁도세 승자라고 해야 한다.
⑤ X — 투표의 역설은 a가 b를 이기고, b가 c를 이기며, c가 a를 이기는 것과 같은 순환이 생겨 꽁도세 승자가 없을 때 나타난다. 이 문항에서는 b가 a와 c를 모두 이기므로 ‘꽁도세 승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틀리고, 올바르게는 꽁도세 승자 b가 존재한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각 투표자의 1순위만 세면 a, b, c가 한 표씩 얻어 승자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꽁도세 기준은 1순위 득표수가 아니라 모든 두 대안 사이의 쌍대다수결 결과를 사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안을 두 개씩 짝지어 모든 쌍의 다수결 결과를 적고, 나머지 모든 대안을 이기는 대안이 있는지 확인한다. 한 대안이라도 모든 상대를 이기면 그 대안이 꽁도세 승자이며, 승패가 순환하면 꽁도세 승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꽁도세 승자는 1순위 최다 득표자가 아니라 일대일 전승자이다.

NoteBase

**문 31. 작은 섬나라 “율도국”에는 해안과 내륙지역에 각각 6명, 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진해일(Tsunami) 경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안지역 주민의 개별수요함수는 $Q = 100 - \frac{1}{2}P$, 내륙지역 주민의 개별수요함수는 $Q = 50 - \frac{1}{3}P$로 표현된다. 경보서비스의 한계비용이 840일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보서비스 수준과 해안과 내륙지역 주민 1명이 각각 부담해야 할 몫은? (단, Q는 경보서비스 수준, P는 주민 부담 몫이다.)**

① 경보서비스 수준은 40, 해안지역 주민은 120, 내륙지역 주민은 30

② 경보서비스 수준은 40, 해안지역 주민은 126, 내륙지역 주민은 42

③ 경보서비스 수준은 40, 해안지역 주민은 140, 내륙지역 주민은 0

④ 경보서비스 수준은 50, 해안지역 주민은 60, 내륙지역 주민은 40

⑤ 경보서비스 수준은 50, 해안지역 주민은 126, 내륙지역 주민은 42

**정답 1번**

### 출제 포인트

비경합적인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량은 모든 주민의 한계편익을 수직으로 합한 사회적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이며, 각 주민의 부담 몫은 그 수준에서의 개인별 한계편익으로 정한다.

### 조건 정리

해안지역 주민은 6명이고 내륙지역 주민은 4명이다. 한계비용은 840이다.
개별수요함수를 역수요함수로 바꾸면 해안지역 주민은 $P_C = 200 - 2Q$, 내륙지역 주민은 $P_I = 150 - 3Q$이다.
공공재는 같은 공급량을 모든 주민이 함께 소비하므로 수량을 가로로 더하지 않고, 동일한 $Q$에서 각 주민의 지불의사를 세로로 더한다.

### 사용할 공식

사회적 한계편익은 $SMB = 6P_C + 4P_I$이다. 따라서 $Q$가 50 이하인 구간에서는
$SMB = 6(200 - 2Q) + 4(150 - 3Q) = 1800 - 24Q$
이다. 효율적 공급 조건은 $SMB = MC$이다. 이 공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지진해일 경보서비스가 모든 주민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되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 계산 과정

1. 효율적 공급 조건을 적용하면 $1800 - 24Q = 840$이다.
2. 이를 풀면 $24Q = 960$, 따라서 $Q = 40$이다.
3. $Q = 40$을 개인별 역수요함수에 대입하면 해안지역 주민 1명의 부담 몫은 $P_C = 200 - 2(40) = 120$,
내륙지역 주민 1명의 부담 몫은 $P_I = 150 - 3(40) = 30$이다.
4. 전체 부담액은 $6 \times 120 + 4 \times 30 = 840$으로 한계비용과 일치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경보서비스 수준 40에서 해안지역 주민 1명의 부담 몫은 120, 내륙지역 주민 1명의 부담 몫은 30이며 전체 부담액도 840이 된다.
② X. '해안지역 주민은 126, 내륙지역 주민은 42'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각각 120과 30이다. 126과 42를 적용하면 전체 부담액이 $6 \times 126 + 4 \times 42 = 924$가 되어 한계비용 840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 X. '해안지역 주민은 140, 내륙지역 주민은 0'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각각 120과 30이다. 총액만 $6 \times 140 = 840$으로 맞추어도 개인별 부담가격이 각자의 한계편익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효율적인 린달 부담이 아니다.
④ X. '경보서비스 수준은 50, 해안지역 주민은 60, 내륙지역 주민은 40'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공급수준 40, 부담 몫 120과 30이다. 또한 $Q = 50$에서의 개인별 한계편익은 해안지역 100, 내륙지역 0이므로 제시된 60과 40도 수요함수와 맞지 않는다.
⑤ X. '경보서비스 수준은 50, 해안지역 주민은 126, 내륙지역 주민은 42'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공급수준 40, 부담 몫 120과 30이다. $Q = 50$에서는 사회적 한계편익이 600으로 한계비용 840보다 작으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공급수준이 아니다.

**오답 포인트**

공공재의 시장수요는 개인별 수요량을 수평합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공급량에서 지불의사를 수직합한다. 또한 ③처럼 주민별 한계편익을 무시하고 총부담액만 한계비용에 맞추면 린달 부담가격이 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개별수요를 역수요로 바꾸고, 주민 수를 반영해 한계편익을 수직합한 뒤 사회적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일치시킨다. 마지막으로 구한 공급량을 각 집단의 역수요함수에 대입해 1인당 부담 몫을 계산하고, 전체 부담액이 한계비용과 같은지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공공재는 한계편익의 수직합, 효율량은 $SMB = MC$, 개인별 부담 몫은 효율량에서의 개인 한계편익이다.

NoteBase

**문 32. 최적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리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이어야 한다.

② 평등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

③ 롤즈(J. Rawls)는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분배하는 것이 그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하였다.

④ 자유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된 분배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다.

⑤ 러너(A. Lerner)에 의하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동등확률 하에서도 균등분배는 최적이 될 수 없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리주의·평등주의·롤즈의 최소극대화 원칙·자유주의·러너의 균등분배론이 각각 어떤 기준으로 바람직한 분배를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공리주의는 개인 효용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분배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평등주의는 분배 결과의 평등을 중시한다. 롤즈는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가장 크게 개선하는 분배를 선택하는 최소극대화 원칙을 제시한다. 자유주의는 정당한 소유권과 자발적 시장교환에서 나온 분배를 중시한다. 러너는 누구에게 어떤 효용함수가 대응하는지 모르는 동등확률의 상황에서는 기대효용 관점에서 균등분배가 최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O.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각 개인의 효용을 합산하므로, 사회 전체의 총효용을 극대화하는 분배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② O. 평등주의적 견해는 사람들 사이의 분배 격차를 줄이고 균등하게 나누는 것을 정의로운 분배의 핵심으로 본다.
③ O. 롤즈의 최소극대화 원칙에서는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분배가 선택된다. 즉 사회후생을 최소 효용 수준으로 평가하고 그 값을 가장 크게 한다.
④ O. 자유주의적 견해는 정부가 특정 분배 결과를 만들기보다 사유재산권과 자발적 교환을 보장해야 하며, 자유로운 시장과정에서 형성된 분배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⑤ X. 틀린 표현은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동등확률 하에서도 균등분배는 최적이 될 수 없다'이다. 러너의 논의에서는 각 효용함수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확률로 대응한다고 보면, 효용함수가 서로 달라도 기대효용의 관점에서 균등분배가 최적이 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⑤는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 보고 균등분배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게 만든다. 러너 이론의 핵심 조건은 효용함수의 동일성이 아니라, 서로 다른 효용함수가 누구에게 대응하는지 알 수 없어 각 사람에게 동등한 확률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배이론은 판단 기준을 먼저 대응시킨다. 총효용이면 공리주의, 결과의 균등이면 평등주의, 최소 수혜자의 후생이면 롤즈, 시장과정과 권리이면 자유주의, 효용함수에 대한 무지와 동등확률 아래의 균등분배이면 러너이다.

**암기 포인트**

공리주의는 합계, 롤즈는 최저치, 자유주의는 과정, 러너는 무지·동등확률 아래의 균등분배이다.

NoteBase

**문 3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② 기초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충당한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이 불가능하여야 하며, 자산조사 결과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한다.

④ 사업장(직장)가입자의 모든 사회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분담한다.

⑤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정답 5번**

**쟁점**

이 문제는 우리나라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대상 기준, 재원 조달 방식, 보험료 부담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재원 및 수급 기준을 서로 바꾸어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용어 풀이**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이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을 평가한 금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핵심 구분**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은 조세를 중심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한다.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지만 제도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부담 방식이 다르며, 건강보험에는 정부지원금도 투입된다. 2023년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은 최저생계비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된 급여별 선정기준을 사용하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상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30%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이다.
- 틀린 표현: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
- 올바른 표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② X
- 기초연금 지급 비용은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충당하지 않는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한다.
- 틀린 표현: '국민연금 보험료로 충당한다'
- 올바른 표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 지급 비용을 분담한다'

③ X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달리 적용하였다.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의 기준 중위소득 비율이 적용되었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모든 급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 틀린 표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이 불가능하여야 하며, 자산조사 결과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한다'
- 올바른 표현: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지 판단하고, 해당 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구분한다'

④ X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모든 사회보험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 외에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한다.
- 틀린 표현: '모든 사회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분담한다'
- 올바른 표현: '사회보험별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방식이 다르다'

⑤ O
- 건강보험은 가입자와 사용자에게서 징수한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국고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의 정부지원금도 재원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제시된 설명은 옳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과거의 최저생계비 중심 기준을 2023년 제도에 그대로 적용하도록 유도한다. ②는 조세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과 혼동하게 하고, ④의 '모든'은 사회보험별 부담 구조의 차이를 가리는 표현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회보장제도 문제에서는 먼저 공공부조인지 사회보험인지 구분한 뒤, 대상 기준과 재원 및 보험료 부담 주체를 각각 확인한다. ‘모든’, ‘일률적으로’와 같은 전칭 표현이 나오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처럼 부담 방식이 다른 예외가 있는지 검토한다.

**암기 포인트**

차상위는 기준 중위소득 50%, 기초연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 건강보험은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이다.

NoteBase

**문 34. 현물보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물보조가 현금보조에 비하여 정책 목적 달성에 효율적이다.

② 현물보조 대상은 주로 해당 현물의 소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재들이다.

③ 현물보조는 현금보조에 비하여 높은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을 수반한다.

④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는 재화는 현물보조가 더 효율적이다.

⑤ 동일한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현물보조가 현금보조에 비하여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

**정답 5번**

### 출제 포인트

현물보조와 현금보조를 정책 목적 달성의 효율성, 수급자의 선택권과 만족도, 행정비용 측면에서 비교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현물보조는 정부가 사용 대상을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정 재화의 소비를 늘리는 정책 목적에는 유리하지만 수급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행정·운영비용을 발생시킨다.
현금보조는 수급자에게 구매력을 이전하여 소비 구성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다. 같은 재정비용이라면 일반적으로 수급자가 자신의 선호에 맞게 지출할 수 있어 소비자 만족도가 현물보조보다 높다.

### 선지별 해설

① O — 현물보조는 지급된 자원이 정부가 의도한 재화의 소비에 사용되도록 제한하므로, 특정 재화의 소비 확대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현금보조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② O — 가치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소비될 우려가 있는 재화이다. 의료·교육처럼 소비를 장려하려는 가치재가 현물보조의 주요 대상이 된다.
③ O — 현물보조에는 대상 재화의 구매·보관·배분과 수급자 관리 등이 필요하므로, 현금만 이전하는 경우보다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이 높다.
④ O — 생산이나 공급에서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면 정부의 대량 구매·공급으로 평균비용을 낮출 수 있으므로 현물보조의 상대적 효율성이 커질 수 있다.
⑤ X — 틀린 표현은 '현물보조가 현금보조에 비하여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이다. 동일한 재정을 투입할 때 현금보조는 수급자가 자신의 선호에 맞는 소비 조합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현물보조보다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

### 오답 포인트

현물보조가 정책 목적 달성에 유리하다는 ①의 판단을 수급자의 만족도까지 높다는 뜻으로 확대하면 ⑤를 맞다고 보기 쉽다. 정책 집행자의 목적 달성과 수급자의 선택권·만족도는 서로 다른 평가 기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책이 특정 재화의 소비를 확실히 늘리려는 것인지, 수급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효용을 높이려는 것인지 먼저 구분한다. 전자는 현물보조, 후자는 현금보조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행정비용은 일반적으로 현물보조가 더 크다.

**암기 포인트**

현물은 정책 목적·용도 통제, 현금은 선택권·소비자 만족이다.

NoteBase

**문 35.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사회보험은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5가지이다.

②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국민보건 서비스 방식이다.

④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식에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⑤ 국민연금은 현금급여, 건강보험은 현물급여가 원칙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종류와 기능, 재정 운영 방식, 의료보장 방식 및 급여 형태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회보험은 질병·노령·산업재해·실업·장기요양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분산하여 소득과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자가 의료비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방식이며, 조세를 주된 재원으로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국민보건 서비스 방식과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보험은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5가지로 구분한다.
② O.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통해 저위험자와 고위험자를 함께 보험집단에 포함하므로, 고위험자만 주로 가입하려는 역선택을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③ X. 틀린 표현은 '국민보건 서비스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의 역할을 하는 사회보험 방식이 중심이다.
④ O. 사회보험의 재원 조달 방식은 보험료를 미리 적립하여 장래 급여에 사용하는 적립방식과, 그 시기의 보험료 수입으로 그 시기의 급여를 충당하는 부과방식으로 구분한다.
⑤ O. 국민연금은 연금액이나 일시금을 지급하는 현금급여가 원칙이고, 건강보험은 진찰·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우리나라의 보편적 건강보험을 영국식 국민보건 서비스와 혼동하게 만든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만으로 국민보건 서비스 방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원을 보험료로 조달하고 보험자가 의료비를 보장하면 사회보험 방식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의료보장 방식은 재원과 공급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험료를 중심으로 보험자가 비용을 보장하면 사회보험 방식이고, 조세를 중심으로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면 국민보건 서비스 방식이다.

**암기 포인트**

한국 의료보장은 사회보험 방식, 국민연금은 현금급여, 건강보험은 현물급여가 원칙이다.

NoteBase

**문 36. 우리나라의 연금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이 가입하는 직역연금으로 구분된다.

② 국민연금은 기여원칙에 따른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완전적립방식이 아니어서 세대 내 재분배효과뿐만 아니라 세대 간 재분배효과도 발생한다.

③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외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다.

④ 국민연금의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정답 3번**

### 쟁점

이 문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체계와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 재정방식, 급여 및 보험료 산정방식을 묻는다. 핵심은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단순히 대한민국 국적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 거주 요건까지 필요하다는 점이다.

### 용어 풀이

직역연금 =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등 특정 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이다.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정한 금액이다.

### 핵심 구분

2023년 시행 국민연금법상 원칙적인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국외에 거주한다면 이 규정만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을 보유하는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되며, 급여 산식과 재정구조를 통해 세대 내·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나타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정 직역을 대상으로 하는 직역연금으로 크게 구분된다.

② O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기여하고 기금을 적립하지만 장래 급여 전액을 개인별로 미리 쌓아 두는 완전적립방식은 아니다. 급여 산식에는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과 개인의 소득이 함께 반영되어 세대 내 재분배가 나타나고, 부분적립 구조에서는 세대 간 재분배도 발생한다.

③ X
국민연금법상 일반적인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므로 국외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리다.
틀린 표현: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외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다.
올바른 표현: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원칙적인 가입 대상이다.

④ O
국민연금의 연금 형태 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법률상 급여의 종류에는 이 세 연금 외에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도 있지만, 선지는 세 연금이 존재한다고 했을 뿐 급여가 오직 세 종류뿐이라고 한 것이 아니다.

⑤ O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사업장가입자는 산정된 보험료를 가입자와 사용자가 나누어 부담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함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적 요건만 보고 '국내에 거주하는'이라는 거주 요건을 놓치게 하는 데 있다. 또한 ④는 연금 형태의 급여 세 가지를 열거한 문장이지, 일시금 급여의 존재를 부정한 문장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민연금 가입 대상 선지는 연령, 국내 거주, 적용 제외 여부를 차례로 확인한다. 급여 선지는 노령·장애·유족의 연금급여와 반환·사망의 일시금급여를 구분하고, 보험료 선지는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율의 곱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국민연금 가입의 기본요건은 '국내 거주 +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다.

NoteBase

**문 37. 한 국가의 민간소비(C), 조세(T), 정부지출(G), 투자(I)가 아래와 같고 재정은 균형상태이며 완전고용국민소득은 7,000이다. 정부지출과 조세를 통해서 국민소득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이다.)**

$$C = 1{,}000 + 0.6(Y - T) \quad G = 1{,}000 \quad I = 1{,}000$$

① 완전고용 달성에 필요한 조세의 감소 규모는 600이다.

② 완전고용 달성에 필요한 정부지출의 증가액은 400이다.

③ 정부지출 증가 시에 정부지출의 증가액보다 국민소득이 더 많이 증가한다.

④ 조세 감세 시에 조세의 감세액보다 국민소득의 증가액이 더 크다.

⑤ 경기침체 등으로 민간의 한계소비성향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지출이 유발하는 국민소득의 증가분은 줄어들게 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균형국민소득을 구한 뒤 정부지출승수와 조세승수를 적용하여 완전고용국민소득까지의 갭을 해소하는 정책 규모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재정이 처음에 균형이므로 $T = G = 1{,}000$이다. 한계소비성향은 $c = 0.6$이고, 완전고용국민소득은 7,000이다. 정부지출 또는 조세를 각각 조정하여 현재의 균형국민소득과 완전고용국민소득의 차이를 없앤다.

**사용할 공식**

재화시장의 균형식은 $Y = C + I + G$이다. 정부지출승수는 $1/(1-c)$, 조세승수는 $-c/(1-c)$이다. 정부지출과 조세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연쇄적인 소비 변화를 반영해야 하므로 단순히 소득갭과 정책 변화액을 같게 두지 않고 승수를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초기 균형국민소득을 구하면 $Y = 1{,}000 + 0.6(Y - 1{,}000) + 1{,}000 + 1{,}000$이므로 $0.4Y = 2{,}400$, 즉 $Y = 6{,}000$이다.
2. 완전고용에 필요한 국민소득 증가분은 $7{,}000 - 6{,}000 = 1{,}000$이다.
3. 정부지출승수는 $1/(1-0.6) = 2.5$이므로 필요한 정부지출 증가액은 $1{,}000/2.5 = 400$이다.
4. 조세승수는 $-0.6/(1-0.6) = -1.5$이다. 조세 감소액의 크기를 $x$라고 하면 국민소득은 $1.5x$만큼 증가하므로 $1.5x = 1{,}000$, 즉 $x = 2{,}000/3 \approx 666.7$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완전고용에 필요한 조세 감소 규모는 600이 아니라 2,000/3 ≈ 666.7이다. 600을 감세하면 국민소득은 1.5 × 600 = 900만 증가하여 6,900에 그친다.
② O — 정부지출승수가 2.5이므로 정부지출을 400 늘리면 국민소득이 2.5 × 400 = 1,000 증가하여 7,000이 된다.
③ O — 정부지출승수 2.5가 1보다 크므로 정부지출 증가액보다 국민소득 증가액이 더 크다.
④ O — 감세액의 크기에 대한 국민소득 증가 배율은 1.5이므로 감세액보다 국민소득 증가액이 더 크다.
⑤ O — 정부지출승수 $1/(1-c)$는 한계소비성향 $c$가 작아질수록 감소한다. 따라서 같은 정부지출 증가가 유발하는 국민소득 증가분도 줄어든다.

**오답 포인트**

①의 600은 소득갭 1,000에 한계소비성향 0.6을 곱한 값일 뿐 필요한 감세액이 아니다. 조세 변화는 먼저 가처분소득과 소비를 바꾸므로 조세승수 $-c/(1-c)$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정부지출승수와 조세승수의 절댓값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초기 균형국민소득과 완전고용 소득갭을 구한 뒤, 정부지출 조정에는 $1/(1-c)$, 조세 조정에는 $-c/(1-c)$를 각각 적용한다. 감세는 조세변화가 음수이므로 국민소득변화가 양수가 된다는 부호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정부지출승수는 $1/(1-c)$, 조세승수는 $-c/(1-c)$이다. 같은 크기의 변화라면 정부지출의 소득 효과가 조세의 소득 효과보다 크다.

NoteBase

**문 38. 정부지출의 증가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바그너(A. Wagner)법칙에 의하면, 1인당 소비가 증가할 때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례하여 성장한다.

② 보몰효과(Baumol effect)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③ 부캐넌(J. Buchanan)은 현대의 대의민주체제가 본질적으로 정부부문의 팽창을 억제한다는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을 제기하였다.

④ 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 J. 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는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에 의하여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⑤ 브라운-잭슨(C. Brown & P. Jackson)에 의하면,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지출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정부지출 증가를 설명하는 학자별 이론과 핵심 원인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바그너: 경제가 발전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공공서비스 수요가 커져 정부지출이 국민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한다.
보몰: 정부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 증가율과 임금 상승 때문에 상대적 생산비용이 높아져 정부지출이 증가한다.
브레넌·부캐넌: 리바이어던 정부는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려 하므로 헌법적 제약이 없으면 정부부문이 과도하게 팽창할 수 있다.
피코크·와이즈만: 전쟁이나 사회적 혼란 같은 위기에는 국민이 감수하는 조세부담 수준이 높아지고 정부지출이 상향 이동한다.
브라운·잭슨: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공급비용 등을 통해 정부지출 증가를 설명하며, 공공서비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면 소득 증가에 따라 정부지출 비중이 커질 수 있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1인당 소비가 증가할 때'와 '민간부문에 비례하여 성장한다'이다. 바그너 법칙은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또는 국민소득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여 정부지출 비중이 커진다고 본다.
② X — 틀린 표현은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이다. 보몰효과에서는 정부 서비스의 생산성 증가가 상대적으로 느린데도 임금은 상승하므로 상대적 생산비용이 높아지고, 그 결과 정부지출이 증가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정부부문의 팽창을 억제한다'이다. 리바이어던가설은 정부를 조세수입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로 보며, 적절한 헌법적·제도적 제약이 없으면 정부부문이 과도하게 팽창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④ O — 피코크·와이즈만의 전위효과에 따르면 전쟁이나 사회적 혼란 같은 위기에는 국민이 받아들이는 조세부담 수준이 높아져 정부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위기 이후에도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⑤ X — 틀린 표현은 '소득탄력성이 줄어들게 되면'이다. 올바르게는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면 소득 증가율보다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율이 높아져 정부지출 비중이 증가할 수 있다.

### 출제자가 노린 함정

각 선지는 실제 학자와 실제 이론명을 제시한 뒤 증가 방향이나 핵심 변수를 뒤집었다. 특히 보몰효과의 '비용 상승'을 '비용 하락'으로, 리바이어던가설의 '팽창 성향'을 '팽창 억제'로 바꾼 표현이 핵심 함정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명과 방향을 함께 연결한다. 바그너는 소득 증가와 공공부문의 상대적 확대, 보몰은 생산성 격차에 따른 상대비용 상승, 브레넌·부캐넌은 수입 극대화형 정부의 팽창, 피코크·와이즈만은 위기에 따른 전위효과, 브라운·잭슨은 중위투표자의 수요와 비용 요인으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바그너=소득 증가, 보몰=비용 상승, 리바이어던=팽창, 피코크·와이즈만=위기 전위, 브라운·잭슨=중위투표자 수요이다.

NoteBase

**문 39.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인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초기에 편익이 집중되는 사업이 유리하다.

②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재화의 시장가격이 기회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잠재가격을 사용한다.

③ 공공사업으로 시장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라면 증가된 소비자잉여가 편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의 경제성이 커질 수 있다.

⑤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편익에 대한 평가가 매우 힘든 경우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이용할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비용·편익의 현재가치, 시장가격과 잠재가격, 소비자잉여, 비용효과분석의 쓰임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의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먼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는 더 작아진다.
잠재가격은 불완전경쟁·조세·외부효과 등으로 시장가격이 사회적 기회비용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할 때 사용하는 평가가격이다.
비용효과분석은 편익을 화폐가치로 측정하기 곤란할 때 비용과 성과의 관계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사회적 할인율이 높아지면 먼 미래의 편익이 더 크게 할인되므로, 편익이 초기에 집중되는 사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② O.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시장가격이 사회적 기회비용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잠재가격으로 비용과 편익을 평가한다.
③ O. 공공사업으로 공급이 늘어 시장가격이 낮아지면 소비자가 얻는 순편익이 증가하므로 증가한 소비자잉여를 사업의 편익에 포함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경제성이 커질 수 있다'이다. 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더 높은 시장이자율로 할인하면 미래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더 작아지므로 공공사업의 경제성은 낮아질 수 있다.
⑤ O. 무형의 편익을 화폐가치로 평가하기 매우 어려우면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비용당 성과를 비교하는 비용효과분석을 이용할 수 있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④는 높은 이자율이 높은 수익성을 뜻한다는 직관을 할인율에 잘못 적용하게 만든다. 비용-편익분석에서는 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작아지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사업의 경제성은 오히려 낮아진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할인율 관련 선지는 '할인율 상승 → 미래 가치의 현재가치 하락'으로 판단한다. 시장가격이 사회적 기회비용을 왜곡하면 잠재가격을 사용하고, 편익의 화폐 환산이 곤란하면 비용효과분석을 적용한다.

### 암기 포인트

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 편익의 현재가치는 작아지고, 무형 편익의 화폐평가가 곤란하면 비용효과분석을 사용한다.

NoteBase

**문 40.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시간, 생명 등)의 가치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 자체로부터 만족을 얻는 사람의 시간가치는 임금률보다 더 높을 수 있다.

② 현재의 임금률로 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시간가치는 임금률보다 더 높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③ 서로 다른 시간이 소요되는 교통수단에 지불되는 요금의 차이를 이용하여 시간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④ 사망 확률을 낮추기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으로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생명의 가치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⑤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액으로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노인이나 장애인의 생명가치를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시간과 생명의 가치를 관찰 가능한 선택이나 소득 자료로 추정할 때, 각 방법이 무엇을 측정하며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간가치는 어떤 활동에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포기하는 임금과 효용을 포함한 기회비용이다. 교통수단 선택처럼 시간과 비용 사이의 실제 선택을 이용하면 시간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생명가치의 지불의사 접근법은 사망 위험을 조금 줄이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에서 통계적 생명가치를 추정한다. 소득상실액 접근법은 사망으로 잃게 되는 미래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소득이 적거나 없는 사람의 생명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한계가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노동 자체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은 한 시간을 다른 활동에 사용하면 그 시간에 벌 수 있었던 임금뿐 아니라 노동에서 얻는 만족도 포기한다. 따라서 시간의 기회비용이 임금률보다 높을 수 있다.
② X. 현재 임금률에서 더 일하기를 원하지만 근로시간이 제한된 사람에게 남는 비근로시간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여가가 아니다. 추가로 한 시간을 일해서 얻는 편익이 그 시간을 비근로시간으로 둘 때의 가치보다 크므로, 그 사람의 시간가치는 임금률보다 낮다고 추정한다. 틀린 표현은 '임금률보다 더 높을 것'이며, 올바르게는 '임금률보다 더 낮을 것'이다.
③ O. 시간은 짧지만 요금이 비싼 교통수단과 시간은 길지만 요금이 싼 교통수단 사이의 선택에는 시간과 금전의 교환관계가 드러난다. 다른 조건을 통제한 뒤 요금 차이를 시간 차이로 나누면 시간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④ O. 사망 위험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개인의 소득과 지불능력에 제약된다. 위험 감소의 효용이 커도 실제 지불 가능액이 작을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은 생명가치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⑤ O.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액을 기준으로 하면 미래의 시장소득이 적은 노인이나 장애인의 생명가치가 낮게 산정될 수 있다. 생명의 효용을 소득만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함정은 '더 일하고 싶다'를 시간가치가 높다는 뜻으로 뒤집는 데 있다. 더 일하고 싶다는 것은 현재 임금률이 남는 비근로시간의 한계가치보다 높다는 뜻이므로, 시간가치는 임금률보다 낮게 평가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근로시간이 자유롭게 선택되면 임금률을 시간가치의 기준으로 삼는다. 노동 자체의 만족까지 포기하면 시간가치는 임금률보다 높아질 수 있고,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해 비자발적 비근로시간이 생기면 그 시간의 가치는 임금률보다 낮다. 생명가치 평가에서는 지불능력에 묶이는 지불의사 접근법과 시장소득에 묶이는 소득상실액 접근법의 한계를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노동의 즐거움은 시간가치를 임금보다 높이고, 추가근로 제약은 비근로시간의 가치를 임금보다 낮춘다.
지불의사는 지불능력의 제약, 소득상실액은 무소득·저소득 생명의 과소평가가 핵심 한계이다.

NoteBase